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6 | 2023 June | Vol. 78

나라재정 보기

FIS 인사이트
재정분야의 AI 활용 및 시사점

재정칼럼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으로의 길을 함께 가자
생각하는 AI 시대의 정부, 재정정보 그리고 미래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근대 재정의 탄생 ③
미국의 행정부 예산편성

FIS 한국재정정보원

CONTENTS

2023 JUNE
Vol. 78

재정 INSIGHT

04
FIS 인사이트
재정분야의 AI 활용 및 시사점
박정화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10
토막 재정제도 이야기
핵심재정사업

12
재정칼럼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으로의 길을 함께 가자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생각하는 AI 시대의 정부, 재정정보 그리고 미래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26
정책연구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김민경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재정 **NOW**

30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2
재정 FOCUS
국유재산

36
키워드 재정
마약

40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재정 **STORY**

54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근대 재정의 탄생 ③ - 미국의 행정부 예산편성

60
재정, 그땐 그랬지
재정혁신에 대한 회고

66
이달의 재정 이야기
디지털 정보화 시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다

70
경제학자가 풀어낸 인문학
초대형 철제 구조물 에펠탑의 탄생 비화

74
문화로 보는 재정 이야기

76
재정 캘린더

78
애독자 코너

Insight

재정분야의 AI 활용 및 시사점

박정화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pjh7387@kpfis.or.kr)

들어가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이 더욱 일상화되었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정부는 2020년 추진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기 부양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즉, 지속 가능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AI의 편향성 등 폐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혁신의 이면에 권리침해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활용은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OpenAI'가 발표한 'ChatGPT'의 등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AI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공공부문 특히 재정분야에서도 AI 기술에 기반한 공적가치 창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즉, AI가 정부의 주요 정책 대상이자 지원 도구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재정운용 관리 측면에서 AI 기술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재정분야에 AI를 접목한 다양한 수단이 공익실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또 공공부문에 활용 가능한 영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국내·외 재정분야의 AI 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AI와 재정: 공익 실현 도구

AI를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 더해 '공공성' 측면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익 실현의 도구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AI는 국가 간(또는 기업) 주요 경쟁 분야이자 산업의 한 축이다. 해외 주요국은 관련 정책과 비전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 산업을 국가 차원의 육성 대상으로 정책적 예산을 투자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즉, 다양한 정부 부문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재정분야에서도 AI를 적잖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지능형 정부[1] 구현은 전통적인 '행정'의 영역을 넘어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지능형 정부에서는 AI의 역할이 중요하다. 'AI의 역할'은 기술에 부여된 정책 결정 권한에 따라 크게 증강(Augmentation)-자동화(Automation)-자율화(Autonomous)로 구분된다. 이 중 '자율화'는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능형 정부'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증강'과 '자동화'가 혼합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2].

공공부문의 AI 기술 활용과 확장 가능성

현재 공공부문의 AI 기술 적용은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 비용과 비효율의 절감 효과가 뚜렷한 분야인 헬스케어, 교통, 안전 및 보안 등의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공공부문에서 '증강' 방식의 AI 기술 적용은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AI 기반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인지 격차 오류의 가능성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에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AI 분석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김민호·한재필, 2021).

AI 기술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공공부문 서비스를 고도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AI가 지닌 다음의 두 가지 고유한 기술적 특성으로 행정 분야 전반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AI 기술은 다른 기술과 쉽게 융합되어 고도화되는 일반목적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며 둘째,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AI 기술의 특성에 힘을 받아 행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향후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이외에 행정자료 처리·수집 분석과정의 지능화와 원활한 정책수요 파악, 합리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공공서비스 전달과정 이해 증진 등을 목표로 공공부문에서의 AI 기술 활용은 확대될 것이다(안준모, 2021). 가령,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보조금 연장평가 등과 같이 지속해서 평가되어 온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AI 기술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 공공부문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다.

2 '자동화'는 인간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단순한 업무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대신 수행하는 방식으로, 오류로 인한 부작용이 낮은 장점이 있다. '증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진단 및 예측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정책 개선에 이바지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국내·외 재정분야의 AI 활용[3]

1) 국외 사례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AI 국가정책의 내용적 기반을 마련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제정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했다. 미국 정부는 민간에게 충족되기 어려운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와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추진 방향은 AI를 자동 경제화 시대의 대응을 위한 정부의 투자·확대와 모니터링, 규제 및 사이버 보안 등의 정책적 대응과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4] 금융서비스 분야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 부정행위 모니터링에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중이며,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정부의 금융혁신을 위한 데이터 및 기계학습 허용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AI 기술을 재정관리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다음 캐나다는 AI 연구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 세계 최초의 국가 AI 전략인 「범캐나다 AI 전략」을 수립했다. AI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대상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세부적으로는 AI 전략 수립-이행-평가 등에 이르는 과정 대부분을 민간의 연구원과 3대 AI 연구소[5]가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채택한 세계적 선도국가로 예산집행의 승인-모니터링-평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 상태다. 대표적 사례로 2007년부터 개별정부 사업의 승인, 예산지출, 사업결과 보고 등을 총괄하는 지출관리시스템(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지난 2021년 최초 AI 머신러닝 기술 역량 증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국가 AI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국가전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영국에서 개발 및 상업화될 AI의 개수와 종류의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AI와 머신러닝을 부정수급과 사기예방 목적으로 배포했다. 노동연금부는 보조금 수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편익 및 수당 청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해당 AI 기술을 통해 토지 등록 및 개인 신용 등과 같은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모아 사람들의 사회적 혜택의 대상 여부를 평가했다.

3 재정분야에 관한 AI 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별 AI 주요 전략과 사례를 분석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과 한세억(2022) 그리고 기타 자료를 참고했다.

4 농업, 금융서비스, 보건의료,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국가 보안 및 방위, 과학, 교통, 기상예측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5 에이미(Ami), 밀라(Mila), 벡터 연구소(Vector Institute)를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한다.

2) 국내 사례

정부는 AI 기술산업 전반을 다루는 정책을 중심으로 AI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R&D 전략(2018)」, 「인공지능(AI) 국가전략(2019)」, 그리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 등의 정책을 통해 AI를 국가전략의 주요 핵심기술로 구체화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생태계 차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해 온 특징이 있다.

현재 공공분야에서 특정 영역인 환경정책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재난안전 정책의 재난재해 위험 요소의 탐지·예측에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적 재정관리 측면에서 재정의 배분과 집행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오영민, 2021; 한세억, 2022). 다만, 보조금 분야에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징수 AI를 통해 탐지하는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2017년 7월부터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각 부처에 부정징후 의심사례를 통보하고 있다. 현재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률은 최근 6% 내외, 적발 건수는 200건 이상이며, 이후 2021년 추가로 도입한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기존 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한 부정수급을 추가로 적발하고 있다[6].

시사점

앞서 AI 기술이 정책지원 수단으로 공공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가능성을 살펴보고, AI 재정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Fuerth and Faber(2012)가 말했듯이 미래사회는 단순히 복잡한 세상이 아니라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이에 정부는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구체적인 전략과 혁신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인바,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AI 기술 도입을 업무방식의 혁신으로 살펴본 후에 AI 기술 도입의 목적성과 적용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즉,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기존의 정책 방향인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에서 나아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다채롭게 변화하는 공공분야와 향후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난제와 융·복합산업 출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공공부문에서의 AI 기술 도입과 활용을 사무와 행정의 효율화로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방식에의 혁신 중 하나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AI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산출물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현재 공공부문 중 재정분야의 AI 기술 활용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AI 기술을 정부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및 결산단계에 적용하면 유사중복 사업의 탐지, 재정사업의 부정수급 및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기에 앞서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과 AI에 기반한 공적가치 창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의 예산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과 부정수급 탐지와 같이 효율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AI의 적용 가능성은 계속 커질 것이다. 다만, 공공분야에 적용되는 AI 기술의 확산 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부작용인 개인정보 무단 활용, 잘못된 정보확산, 여론 조작 등의 악의적 용도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AI 오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공존한다. 이에 공공부문에서 AI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되, 우려되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지능형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민호·한재필. (2020). AI 기반 정부 지원 통합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020-07, 한국개발연구원.
- 안준모. (2021). [기획논문] 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의 고도화: 기회와 도전,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 오영민. (2021). 예산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과 한계,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제60호, 10-13.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인공지능시대의 정부: 인공지능이 어떻게 정부를 변화시킬 것인가?, IT&Future Strategy.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주요 국가 AI 전략 분석: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캐나다를 중심으로, IT&FUTURE Strategy.
- 한세억. (2022). 인공지능(AI) 기반 예산지킴이 모델구축 및 운영: 가능성과 한계, 예산정책연구, 제11권 2호, 37-73.
- Fuerth, Leon S. and Evan M. H. Faber. (2012). Anticipatory Governance Practical Upgrades: Equipping the Executive Branch to Cope with Increasing Speed and Complexity of Major Challenges.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 국고보조금 시스템 개선으로 부정수급 적발률 지속 높여가, 2023년 2월 14일자 기사.

핵심재정사업

Core Business

1. 핵심재정사업이란?

정부는 금년부터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여 사업 전주기를 밀착,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에 대해 재정당국과 사업 소관 부처가 집행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년 8월 사업 선정 착수 후 지난 1월 확정, 3월부터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와 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 요인 및 해소 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해 오고 있다.

핵심재정사업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국정 비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한 사업으로, 3대 분야에 걸쳐 있으며 2023년에는 12.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 전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해서 밀착,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2.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정부는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난 1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23년 예산이 집행 중인 현재에도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프로그램 관련 현장 방문 및 스타트업 대표 현장 간담회 개최 등 현장점검 및 진행 상황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핵심재정사업에 대한 작업반 논의 결과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사업별 중간 결과는 2024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

1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근로자(예술인·특고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 장애인 돌봄
  (발달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3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5 지역 균형 발전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방안 포함

미래 대비 ·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6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 차세대 반도체 R&D ※ 과기부 주관 평가
  - AI 반도체 사업화 지원

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 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개발
  ※ 과기부 주관 평가

8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기반 구축 강화
  (유턴기업, 외투기업 지원)

9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및 민관협력 창업육성

국민 안전 ·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 강화

10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산불 대응능력 강화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훈 실현
-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병 봉급, 급식, 숙소, 사회진출지원금)

12 국격·외교 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 국조실 주관 평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으로의 길을 함께 가자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최근 국가재정운용 방식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에 대한 판단에서 비롯된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음을 강조한다. 이들은 국가 빚을 현재보다 더 늘리더라도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에 현세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재정상황에 대한 낙관적 판단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전부터 국가재정의 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면, 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특별한 경제적 위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20년 3.6%, 2021~2023년 3.9%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짰다.

1990년 이후 3% 후반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기록한 적은 IMF 외환위기 시기 중 단 1년에 그쳤다는 점[1]을 고려할 때, GDP의 약 4%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년 연속으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운용계획이 얼마나 확장적인가를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국가채무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OECD 국가들이 모두 동질적이지는 않음을 강조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지만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서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장점이 존재하지 않기에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우 빠른 인구고령화가 가져올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더불어서 재정지출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재정누수 즉, 재정의 비효율성이 클 수 있음을 경고하며, 국가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통한 중장기 재정상태에 대한 진단을 국가부채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행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진단

국가재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총량 지표로 흔히 활용되는 것이 국가부채이다.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를 부채통계의 포괄범위 및 회계기준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 중이다. 첫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포괄하지만 중앙정부의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운용하지 않는 기금을 제외하며,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부채통계를 산출하는 국가채무(D1)이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비영리공공기관을 포괄하며 발생주의 기준[2]으로 부채통계를 작성하는 일반정부 부채(D2)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정부 부채(D2)처럼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되나 일반정부 부채(D2)의 포괄범위에서 비금융공기업까지 넓힌 부채 지표인 공공부문 부채(D3)이다.

1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국난에 비교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2.4%, 1998년 4.6%, 1999년 3.5%, 2000년 0.9%를 기록하여 4%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999년 단 1년에 그쳤다.

2 발생주의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4.).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아직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중기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가채무(D1) 지표를 활용한다. 그러나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다수의 국가가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일반정부 부채(D2)를 사용한다[3]

〈표 1〉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단위: 조원, GDP 대비 %)

유형	2021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 기준	회계 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970.7조원 (46.9%)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및 GFSM 1986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066.2조원 (51.5%)	D1 + 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 (GFSM 2001)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427.3조원 (68.9%)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2023.2.), 「월간 재정동향」, p.28 저자 수정

IMF의 202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이하 WEO 통계)에 수록된 일반정부 부채(D2) 통계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F의 WEO 통계는 전 세계 196개국의 거시경제·재정변수에 대한 실적치 및 미래 전망치 자료를 1980년부터 2028년까지 수록하고 있다. 본 통계에 따르면 41개국을 선진국, 나머지 155개국을 신흥국·개도국으로 그룹화하고 있고, 선진국 안에서는 유로화 사용국 20개국 및 G7 국가를 별도의 그룹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1년 결산 기준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1,066.2조원으로 GDP 대비 51.5% 수준이다. 이는 38개 OECD 회원국 및 40개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순위가 각각 11위 및 1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의 38개 OECD 회원국 및 40개 선진국 단순평균은 75.4%와 78.0%로 우리나라의 D2 비율보다 약 1.5배나 높다. 비교 국가군을 G7 국가로 한정하면, 2021년 기준 G7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평균은 133.7%로 우리나라의 약 2.6배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전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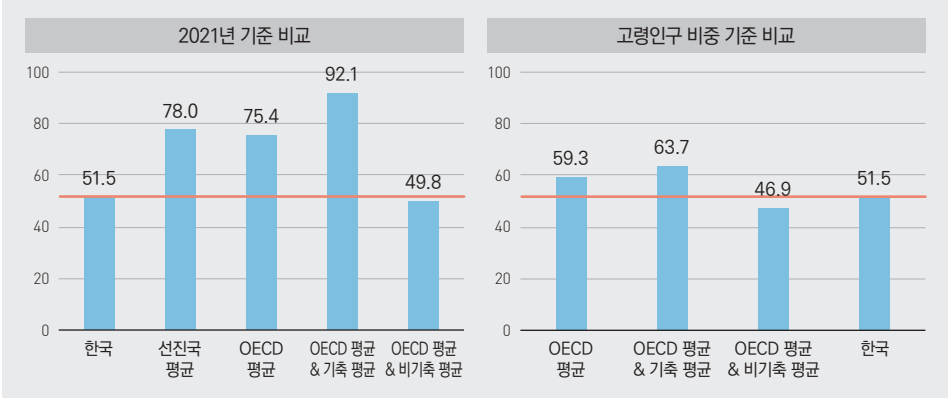
문제는 같은 선진국 그룹 내에서도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38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하면 2011년 이후 25개국이 기축통화국에 해당하고 13개국이 비기축통화국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기축통화국의 평균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92.1%이고, 비기축통화국은 49.8%이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에 해당하기에 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 평균 부채비율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오히려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약 1.7%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5%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에서의 평균 부채비율을 파악한바 59.3%로 파악되었다[4]. 특히 OECD 회원국 중 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비율은 63.7%인 반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비율은 46.9%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가 간 인구고령화 비율의 차이 및 기축통화국 여부를 고려하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시 우리나라의 현행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부채비율은 OECD 회원국 또는 IMF의 WEO 통계상 선진국의 단순평균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고 아직은 고령인구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건전하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자료: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및 OECD.stat, 저자 작성

2. 중장기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진단

IMF의 WEO 통계는 2020~2022년까지의 실적을 기반으로 2028년까지 각국의 일반정부 부채에 대한 전망값을 제시하고 있다. 전망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개별 국가에 대한 경제전망, 중기 재정계획 및 과거 재정운용 방식을 근거로 추계했을 것으로 판단

3 공공부문 부채(D3)를 생성해서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국가가 소수여서 공공부문 부채(D3)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에 적합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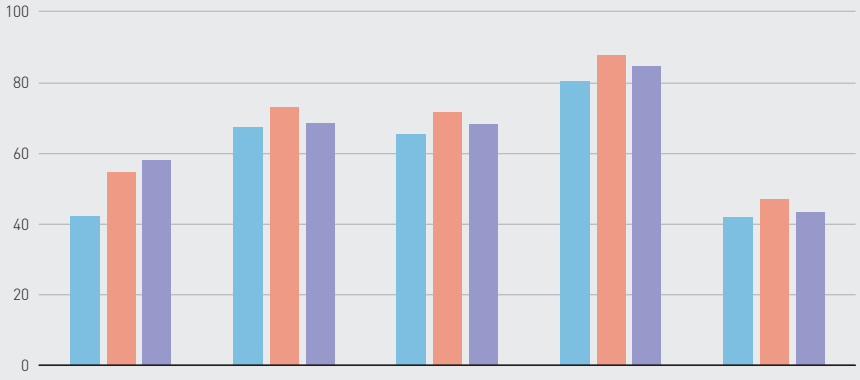
4 38개 OECD 회원국 중 IMF의 WEO 통계 수록기간 외의 기간 또는 부채 정보가 없는 기간에 우리나라의 2021년 고령인구 비중과 유사한 고령인구 비중을 가진 국가가 7개국이었고, 이 국가들은 평균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되었다.

된다. 동 자료는 중기시계에서 각국의 재정운용 기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가재정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2028년까지의 부채비율 전망은 각국의 현행 재정운용방식이 악화된 재정상태를 다시 건전하게 하는 복원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판단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19~2022년) 중 부채비율은 42.1%에서 54.3%로 12.2%p 상승했다. 동 기간 중 IMF의 WEO 통계상 선진국 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67.4%에서 72.8%로 5.4%p 증가했고, OECD 회원국은 65.3%에서 71.7%로 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5.3%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더 많은 부채 증가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기간(2022~2028년)에는 선진국 그룹, OECD 회원국 전체 그룹 및 OEC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 그룹 모두 평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와 재정운용방식이 악화된 재정상태를 다시 복원시키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기간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변화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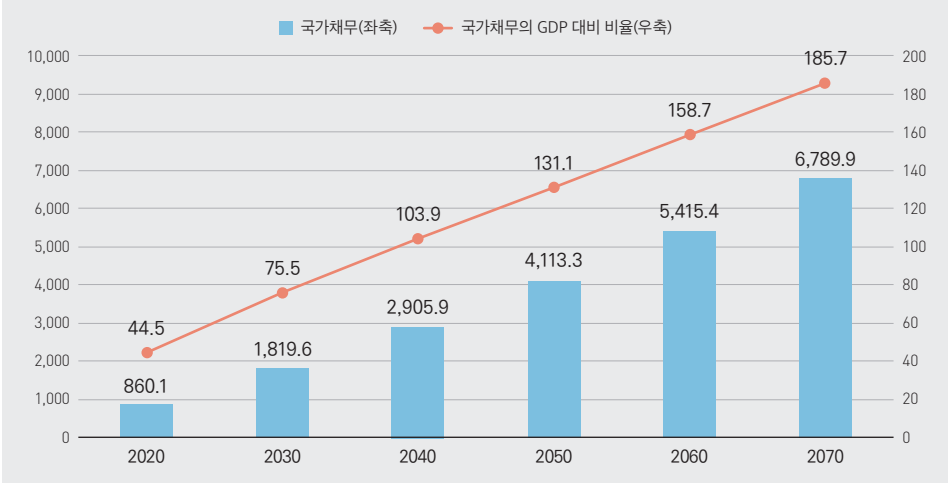
	한국	선진국 평균	OECD 평균	OECD 평균 & 기축 평균	OECD 평균 & 비기축 평균
2019	42.1	67.4	65.3	80.5	41.8
2022	54.3	72.8	71.7	87.7	47.1
2028	58.2	68.3	68.2	84.5	43.2

자료: IMF, 2023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저자 작성

한편 장기적인 관점의 국가재정 흐름은 정부가 수행하는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D1)은 2045년 99.6%로 정점에 도달한 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81.1%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5].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라는 재정위험 요인을 전제하더라도 건전성을 회복할 복원력을 지녀 재정 지속 가능성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결과가 중앙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통제하는 재정규율의 도입을 전제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이런 재정규율을 도입하지 못하였을 때의 장기적인 재정 모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일시기에 장기 재정전망을 수행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결과를 이용한다면, 재정규율을 도입하지 못했을 경우의 국가채무 비율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재정규율이 없는 현행 제도 유지 시, 국가채무 비율은 2060년 158.7%이고, 2070년에는 185.7%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6]. 다시 말하면, 현재 예측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 2020년 당시의 재정운용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영역에 도달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3〉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 장기 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주: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p.52

5 정부는 이런 결과를 현상유지 시나리오로 부른다. 이 밖에도 2020년 정부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성장대응 시나리오 및 인구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6 이런 결과는 전망기간 중 어떠한 경제적 위기도 닥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가정하에 도출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

비록 우리 개인의 삶은 유한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는 영속성을 지니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국가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니며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가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은 언뜻 보기에 다른 나라보다 튼튼해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성장 추세 등을 고려하면 특단의 재정적 조치가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국내외의 많은 기관이 경고하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이 최소한 지금 정도의 삶을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국가 단위의 노력이 시급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인 단위에서는 자유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국가나 외부의 도움에 길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더 이상 근로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안다. 은퇴 후 노년의 삶이 빈곤에 허덕이지 않으려면 젊어서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 물론 비자발적 요인으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는 십시일반 그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스스로 노력도 하지 않고, 국가나 다른 사회구성원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떼쓰는 행태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빈곤문화(Poverty Culture)이다. 이러한 빈곤문화는 마약과 같은 포퓰리즘적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사회에 침투한 사회적 병폐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들이 쏟아내는 포퓰리즘적 정책은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Odysseus)가 마주했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이렌(Sirens)과 같다. 사이렌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선박에 묶은 오디세우스처럼 우리도 포퓰리즘적 정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기결단이 필요하다.

국가 단위에서도 국민의 고혈로 마련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치권의 적자편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이 시대에 맞지 않는 재정 칸막이를 없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포퓰리즘적 정책에 따른 적자편향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국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7]. 이와 더불어서 행정부 자체도 재정 만능주의를 과감하게 버리고, 시장경제와 개인의 창의를 우선시하며 적극적 갈등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혁신은 언제나 기득권의 반발을 불러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존속을 위해 할 일을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 국민의 지지에 기대어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고 떠나는 유능한 정부가 탄생하기를 바란다.

7 재정준칙의 도입을 준수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재정당국이 앞서서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이동함에 따라 그동안 유지되어온 암묵적 재정규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지경에 도달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재정당국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재정당국은 사이렌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선박에 묶은 오디세우스처럼 재정준칙이라는 제도에 스스로를 묶으려는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AI 시대의 정부, 재정정보 그리고 미래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4차 산업혁명의 돌풍은 서막에 불과했다. ChatGPT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성형 AI의 출현은 매우 충격적이다. 이 생각하는 AI 비서는 그 대답과 해결 방안이 너무나 정확하고 훌륭해서 인간의 실력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정직함과 진짜 실력을 감추고 조용히 뒤에서 큰일을 도모할 줄 아는 담대함까지 갖추고 있다.

마침 올 4월에 인하대학교에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변해야 하는데 특히 공무원들은 문서 위주의 보고서 작성보다는 창의적인 업무나 국민 소통과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대학 교육의 변화도 필요한데 첫째, 대학의 개념은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의 연결, 둘째, 교육보다는 소통과 공감의 공간, 셋째, 교수는 상담과 정보-AI-사람 연결자 및 혁신 촉진자 역할 담당, 넷째, 많은 정보와 암기보다는 진로와 비전에 맞는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끝으로, 다차원의 지식 학습과 그것을 잘 요약하

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곳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나의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미 향후 다양한 형태의 AI가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보편적인 업무가 되어온 보고서 작성, 기획, 데이터와 정보 입력 및 요약, 회의 문건 정리 등의 업무를 거의 대체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이견은 없어 보인다. 그럼 앞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국가 재정정보 관리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공무원 채용과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우선 한 사회의 인적자원 투입(Input) 과정에서 암기와 요약의 능력평가를 위주로 한 기존의 공무원 채용시험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학입시제도와 각종 수행능력평가 시험 등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형화된 시험을 통해 줄 세우기를 하는 대학교육과 공무원 채용 방식은 바뀌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체계의 투입과 산출(Output)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인재 양성과 관련해 권역별로 일반대학원(학문 중심), 전문대학원(공무원 양성), 특수대학원(평생교육 및 실무자 재교육 중심)으로 배분하여 표준화된 AI 관련 교육과 창의성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학습방법을 공유하면서 지역 맞춤형 공공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바로 이러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산학연 융합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앙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직에 대한 인기는 땅에 떨어져 이직을 희망하는 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이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영등포, 노량진 등 공무원 시험 준비의 대명사가 된 유명 학원들도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다. 기계적인 사고와 AI보다 못한 수준의 평균적 쓰기와 표현능력으로는 이제 누구도 살아남기 힘들다. 더구나 이제 AI가 문제 출제도 잘하고 채점도 잘하는데 보름씩 합숙하며 수험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문제를 만들어 낼 이유는 더욱 없다.

AI를 활용한 국가 재정관리 사례(ChatGPT 답변 수정 정리)

미국 국세청(IRS): IRS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금 준수 및 사기 탐지를 강화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세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규정 미준수 또는 사기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패턴을 식별한다. 국세청은 탐지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세금 사기 사례를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세무 감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세청(NTS): 국세청은 세무 감사 및 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세 인공지능 시스템(TAIS)이라는 AI 시스템을 구현했다. TAIS는 대량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탈세 사례를 식별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GDS): GDS는 '스펜드 인사이트'라는 AI 기반 지출 분석 도구를 개발했다. 이 도구는 자연어 처리와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정부 지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분석한다. 이 도구는 공공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여 더 나은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비용 최적화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싱가포르 정부기술국(GovTech): 싱가포르의 GovTech는 정부 기관의 재무 관리 관련 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이미에게 물어보세요'라는 AI 기반 챗봇을 개발했다. 이 챗봇은 자연어 처리와 머신 러닝을 사용하여 재무 정책, 절차 및 규정과 관련된 질문에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이 AI 기반 솔루션은 재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부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에스토니아 전자세무국(e-Tax Board): 에스토니아의 국세청은 잠재적인 세금 사기 사례를 감지하기 위해 AI 기반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 시스템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식별하고, 의심스러운 거래에 플래그를 지정한다. 이 AI 시스템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세금체계를 개선하고 탈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ChatGPT는 이렇게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질문에 간결하게 정리해 문제해결 방안까지 제시한다. 지금 필자는 물론 전문가로서 보다 더 명확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다.

생성용 AI를 활용한 재정정보 개선방안

ChatGPT는 AI 기반 재정정보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예산편성, 지출관리 및 재무보고를 포함하는 정부재정시스템은 ChatGPT 등 생성형 AI를 통해 아래와 같이 개선될 수 있다(필자가 보완 및 수정함).

기획예산 및 분배: 정부의 기획예산 및 분배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AI는 과거 데이터, 경제지표 및 사회적 요인을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예측 및 분배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ChatGPT는 정부 공무원이 데이터 기반 권장 사항을 이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사례: 기획재정부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경제지표, 수익동향, 사회복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다. ChatGPT는 정부의 내부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어 공무원이 AI 모델과 상호 작용하고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예산 시나리오를 논의할 수 있다.

재무 투명성 및 책임성: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 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AI는 재무 보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재무 데이터의 이상 또는 불규칙성을 감지하여, 감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hatGPT는 금융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정부 지출을 이해하도록 돕고, 재정 투명성에 관한 질문을 처리할 수 있다.

사례: 한국 감사원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감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재무 부실 또는 사기의 잠재적 사례를 식별할 수 있다. ChatGPT는 웹사이트에 통합되어 감사 절차, 재무 투명성 지침에 대한 액세스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지출에 관한 시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사기 탐지 및 예방: 세금 사기, 조달 사기, 공공 자금의 오용 등 정부 재정에서 사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AI는 대량의 금융 및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기 행위를 나타내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ChatGPT는 정부 공무원이 AI로 생성된 사기 경보를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사기 예방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사례: 행정안전부는 AI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정부 조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심스러운 패턴을 식별하며 잠재적인 사기 사례를 표시할 수 있다. ChatGPT는 내부 통신 플랫폼에 통합되어 조달 담당자에게 실시간 지원을 제공하고 사기 방지 조치를 안내하고 조달 규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비용 최적화 및 효율성: 정부 재정 시스템에는 종종 복잡한 프로세스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련된다. AI는 리소스 할당을 최적화하고 비용 절감 영역을 식별하며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 ChatGPT는 공무원이 AI가 생성한 권장 사항을 이해하고 여러 부서 간의 협업을 촉진하며 비용 최적화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사례: 기획재정부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행정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비용 최적화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 ChatGPT는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에 통합되어 공무원이 AI 생성 권장 사항을 이해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비용 최적화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쿼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ChatGPT는 주의할 점을 말해 주는 친절함도 잊지 않았다. 즉 AI 및 ChatGPT를 채택하면 한국 정부 재정 시스템이 크게 개선될 수 있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알고리즘 편향, 인간 감독의 필요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AI 구현에는 AI 기술의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AI-기계가 공존하는 신세계

이렇게 생성형 AI는 전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주무기관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제도와 기술, 윤리와 철학적인 대안까지 망라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해결과 대안 제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끝없는 인간의 욕망과 파멸, 부의 축적과 과잉생산과 과소비, 자존감과 우울함, 성취욕과 무력함 등 이중적인 사회와 인간의 모습은 이미 그러한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따라서 그동안 불변의 법칙처럼 숭배하고 지켜왔던 성문법 중심의 법치국가, 보고서 작성과 서열 중심의 관료제, 늘 시간에 쫓기는 정부의 기획-예산-분배-평가 회기와 예산제도, 암기와 정해진 모범답안을 강요하는 시험제도,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채용과 불평등, 근본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과 규제에 익숙한 기득권층과 제도들은 이제 AI에 항복하고 권한을 넘겨주어야 할 것 같다. 이제 우리 인간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와 영역을 개척할 시기이다. 사람-AI-기계가 공존하는 신세계의 새로운 판에서 누가 먼저 이를 선점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미래의 국가와 나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며, 이러한 담대한 미래를 준비할 주체는 기존의 기득권층과 관료제가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부지런히 전문성을 키우고 준비해온 사람들일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매우 감성적이고 이타적인 인성을 가진 신인류의 조건을 겸비한 사람들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집행통계 작성을 위한 재정사업 유형 분류

김민경 재정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mkkim@kpfis.or.kr)

1. 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정치적·정무적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정사업 집행은 재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관리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재정사업 관리는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등 성과 관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따라서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이를 재정관리 시스템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시스템상에서 재정사업 유형을 관리한다는 것은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하의 계층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각 재정사업별로 적정한 속성값 체계를 설계하고 그 속성값을 적정히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재정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dBrain+상에서 재정사업별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속성정보의 체계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서 적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이전에 운영하던 구 dBrain 시스템의 속성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인 재정정책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 생산에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Brain+ 시스템 상의 사업 속성정보 체계를 분석하고 재정사업 유형을 분류하여 시스템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분석하여 집행통계 생산을 위한 재정사업의 분류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두 번째로는 dBrain+ 시스템상의 재정사업에 관한 속성정보 및 관련 메타데이터 지정 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dBrain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마지막으로는 향후 dBrain+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한 부분을 재정정보 수요에 신속,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사업 속성정보 설정을 중심으로 재정정보 관리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재정사업 유형 분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의 기본 구조는 2007년 도입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프로그램 예산제도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 구조는 재정운용이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통제 중심의 품목별 분류체계를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의 기능별 분류체계로 전환한 제도이다. 2022년 기준, 프로그램 예산 구조는 16개 분야, 74개 부문, 656개 프로그램, 2,767개 단위사업, 8,45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dBrain+ 역시 프로그램 예산 구조에 따라 재정사업이 계층화되어 있는데 재정통계의 생산 및 재정정보 활용의 기본단위는 세부사업 단위에 기반하고 있다. 재정사업의 분류는 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정보의 활용 및 재정통계 작성과 생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따라서 재정사업의 세부적인 구분은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하며 국제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유용한 재정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류의 기준에 따른 재정사업 유형 분류는 기능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정책기반 사업 분류로 나누어 분석했다. 기능별 분류는 국가 재정활동의 기능을 크게 교육, 국방, 환경, 보건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를 부문으로 세분하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16개 분야, 7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성질별 분류는 경비지출의 직접적인 대상을 기준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비, 상환지출, 전출금과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2022년도 기준 세출과목 구분은 24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92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재정을 성질별로 분류한 후 시스템상으로 고유 성질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품목별 분류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기반 사업 분류는 재정사업을 분류함에 있어 별도의 목적체계를 따라 재정사업을 유형화하여 재분류, 재정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재분류의 목적은 특정 정책의 효과나 집행 현황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특정 재정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제기된 정책 하에서 소관과 부문, 분야 등을 통합하여 연관성에 따라 집계하는 것으로 그 예로는 생활 SOC 사업, 일자리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다 부처, 다 분야 복수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세

부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정책 기반의 사업 분류라고도 하며, 시스템 상에서 속성 값으로 부여되어 관리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수기로 선별되어 관련 부처나 재정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dBrain+ 시스템의 재정사업 유형 분류 및 집행통계 활용

dBrain+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예산 구조를 바탕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별 재정사업의 예산편성-집행실적-결산정보의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6개의 사업 유형별 서식을 선택하여 입력하는데 사업정보 유형 중 대부분은 '표준-일반'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R&D, 정보화, ODA, 수지차지원기관, 균특회계 등으로 서식이 나누어져 있다.

또한 사업정보 입력 후, 예산요구서에는 기본적인 재정사업 정보 이외에도 구조조정 대상 여부, 정책과제 여부 지원조건, 수행 주체, 기대효과 등 더 상세한 정보가 입력되지만 활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최근까지 DB화가 이루어지기 쉬운 형태가 아닌 텍스트 기반의 한글 파일 형식의 부속 파일로 기록되고 있어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에는 한글파일 형식에서 DB 입력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한글요구서로 탑재된 파일도 DB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활용도가 높아진다.

두 번째로는 주요 정책에 따른 재정사업 유형의 관리는 현재 dBrain+상에서 사업 입력 시에 선택적으로 입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명확하게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예산의 계층 구조는 필수 입력 사항으로 선택형 콤보 항목 필수 지정 입력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사업이나 국정과제 등의 항목은 사업담당자 재량에 따라 선택적인 오픈형 항목으로 입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시스템상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과제 혹은 국정과제별 재정 소요 관리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메타 데이터 관리 및 생성하려는 개선방안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dBrain+ 시스템상 재정사업 유형 관리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재정사업에 관한 속성정보나 메타데이터 입력을 오로지 사업 입력 담당자 재량에 맡기는 구조이므로 대부분의 값이 지정되지 않고 필수 입력 값만 겨우 입력된 실정이고, 오프라인을 통한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해 상세 정보가 dBrain+에 총괄적으로 입력·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는 필요한 사업정보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시스템적으로 입력하고 관리할 유인과 관심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인 관점 및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와 결합하고 앞서 언급한 예산순기나, 정책 테마별 의미 있는 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속성정보나 분류정보가 태깅(Tagging) 되거나 메타 데이터 방식으로 입력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4. dBrain+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통계 생산을 위한 제언

첫 번째로는 2022년에 dBrain+ 시스템으로의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면서 추가된 재정데이터시스템(KORAHS, KOFIS)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재정데이터시스템은 예산 및 결산 등과 같은 정부의 재정정보를 다양한 분석 기능 제공을 통해 사용자가 재정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재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써 dBrain+에 생성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추출 및 집계하여 데이터 저장소(Data Warehouse)에 적재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본 구조이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에서 유지하되 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필요한 재정정보 및 통계 군집화를 수월히 구현할 수 있는 dBrain+ 시스템으로의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당국에게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일자리, 안전, 문화, SOC, 국정과제 등 각 속성으로 사업 유형 및 군집화하여 시계열에 따른 변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재정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로서의 사업정보 관리 시스템으로의 확장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에게는 정책, 사업, 수혜자 관련 속성 분류를 기반으로 추출된 재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정책 제공이 가능할 것이고 재정당국 및 전문가에는 각 사업 속성 및 군집화 가능한 속성 제공으로 사업군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재정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관점의 재정통계 생산도 가능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사업정보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과 집행통계 간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 생산이 필요하며 재정사업 유형을 속성정보의 설계와 정비를 통해서 쉽게 군집하고자 하는 유형별 통계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 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4월 기준 재정동향

정희민 재정정보분석센터 사원(himin18@kpfis.or.kr)

총수입

211.8조원
(누적 기준)

2023년 예산
625.7조원

211.8조원
진도율 **33.9**%

총지출

240.8조원
(누적 기준)

2023년 예산
638.7조원

240.8조원
진도율 **37.7**%

통합재정수지

29.0조원 적자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
(누적 기준)

국가채무

1,072.7조원
(누적 기준)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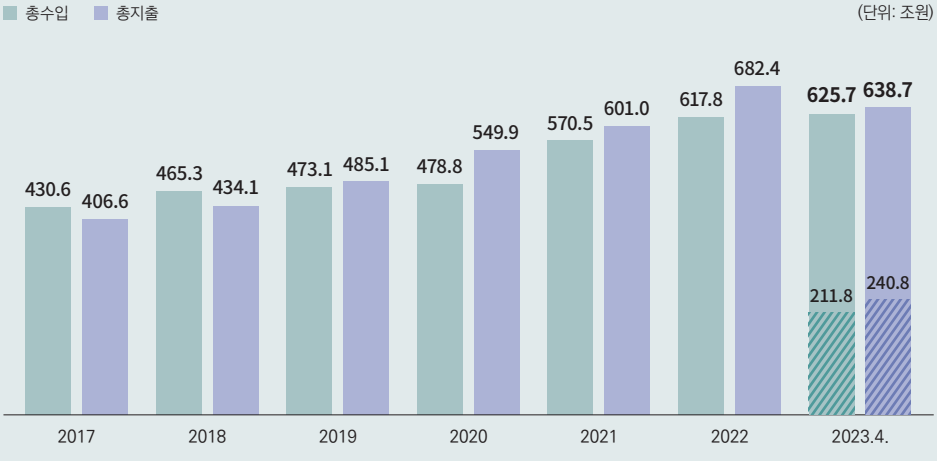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211.8조원

전년 동기 대비
-34.1조원

총지출
240.8조원

전년 동기 대비
-26.5조원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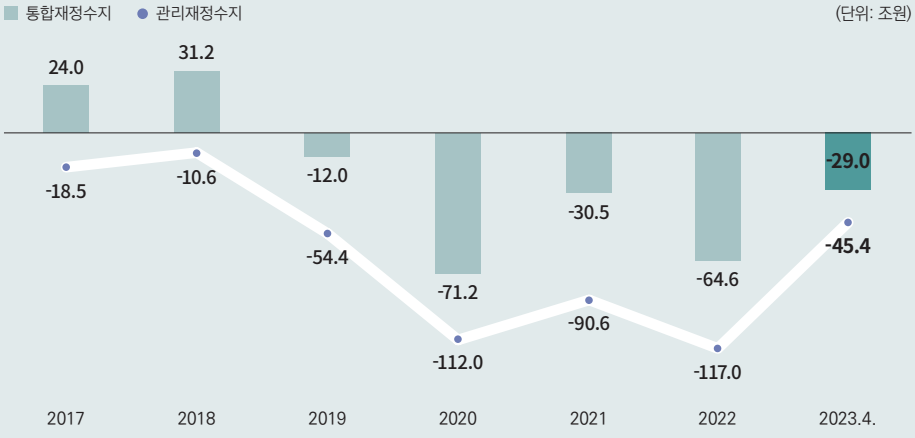
29.0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7.7조원

관리재정수지

45.4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7.4조원



주: 2022년까지는 결산, 2023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6.4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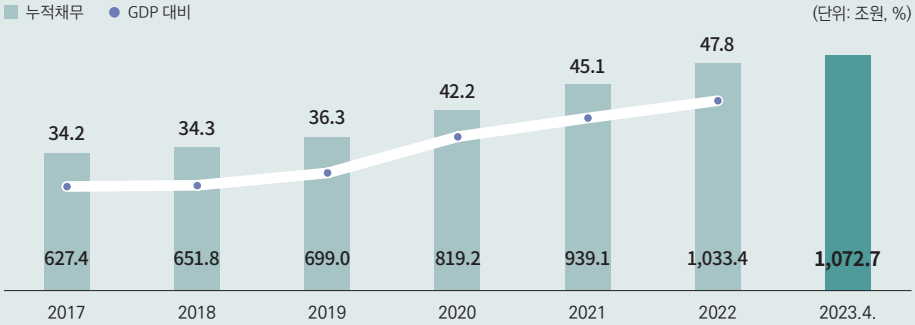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1,072.7조원

전월 대비
+19.1조원

전년 말 대비
+39.2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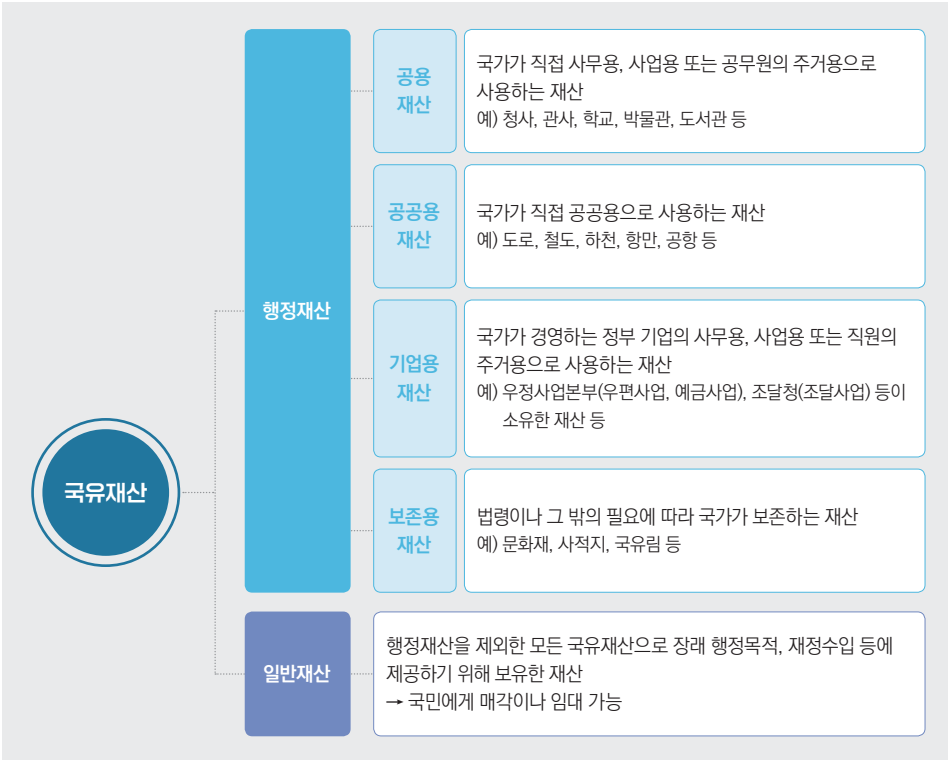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유재산

■ 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재산으로 정의

-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국가가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또는 보유한 재산
  - 일반재산은 별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국가 이외의 개인, 법인 등에게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이 가능한 재산
- (국유재산의 유형) 유형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유가증권, 무체자산 등으로 분류

〈그림 1〉 **국유재산의 종류**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표 1〉 **국유재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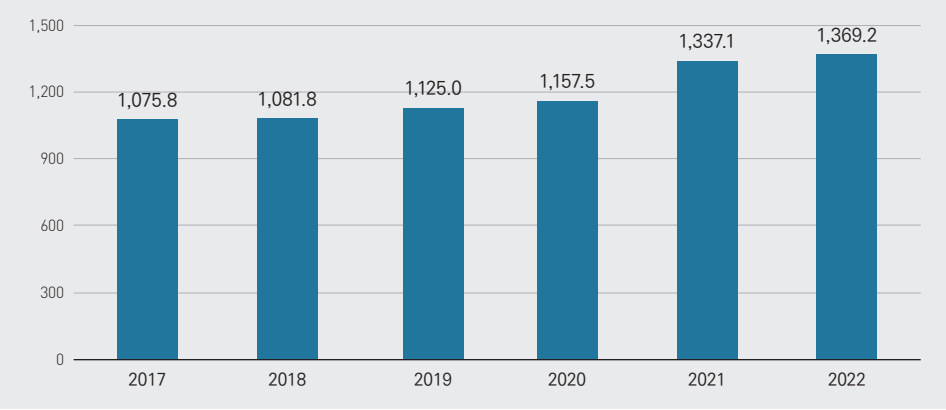
유형	예시	유형	예시
토지	국유지	선박·항공기	소방·치안용 선박 및 항공기
건물	국유건물	기계기구	기관차, 모노레일 등 궤도차량
공작물	국유지나 국유건물 등에 부착된 부속물, 부합물, 종물 등	유가증권	증권, 주식, 채권
입목죽	국유지상에 식재된 나무 또는 대나무	무체재산	지상권, 전세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자료: 한국재정정보원,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은 얼마일까요」

■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규모는 2022년도 결산 기준 1,369.2조원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그림 2〉 **정부의 국유재산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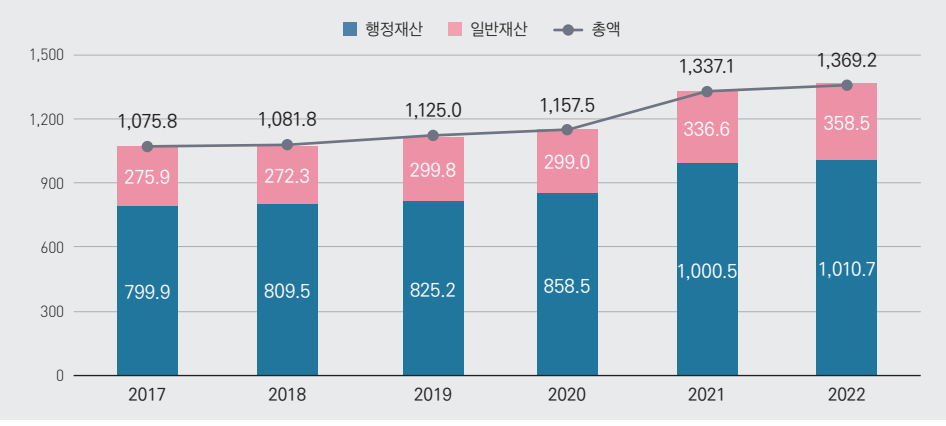
자료: 연도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한편 행정재산은 1,010.7조원으로 전체 국유재산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358.5조원으로 26.2%를 차지

- 2022년 국유재산의 규모는 2021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그중 행정재산은 1.0%, 일반재산은 6.5% 증가

〈그림 3〉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규모**

(단위: 조원)



주: 2022년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정부청사의 재산 가치는?

2022년 말 기준, 정부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 9천억원이며,
가장 최근 건립된 정부세종청사의 가치는 3조 7천억원

순위	구분	장부가액	토지	건물	비고
1	세종청사	36,783	20,475	16,308	1·2·3단계, 중앙동
2	대전청사	26,747	25,840	907	-
3	서울청사	15,677	14,688	989	-
4	과천청사	10,321	9,741	580	-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철도의 재산 가치는?

2022년 말 기준, 고속도로 중 경부고속도로는 12조 2천억원이며,
경부고속철도는 7조 5천억원으로 각각 가장 높은 가치를 나타냄

순위	구분	장부가액	비고
1	경부고속도로	121,830	서울~부산
2	영동고속도로	81,606	인천~강릉
3	서해안고속도로	80,913	서울~목포

순위	구분	장부가액	비고
1	경부고속철도	74,637	서울~부산
2	경부선	57,272	서울~부산
3	경의선	51,834	서울~도라산

무형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2022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가
1천 909억원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무형자산

(단위: 억원)

순위	구분	장부가액
1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국토부)	1,909
2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재부)	802
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복지부)	485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마약

이달의 이슈키워드

금연 성차별 가상화폐 독립운동가 유해물질 어린이집
독감 입대 성희롱 조선 육아 우정사업 보이스피싱 출산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며 언론에서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 여론 및 키워드 분석시스템 내 '마약' 언급량이 크게 늘었다. '범죄', '수사' 등도 주요 연관 키워드로 도출됐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대응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마약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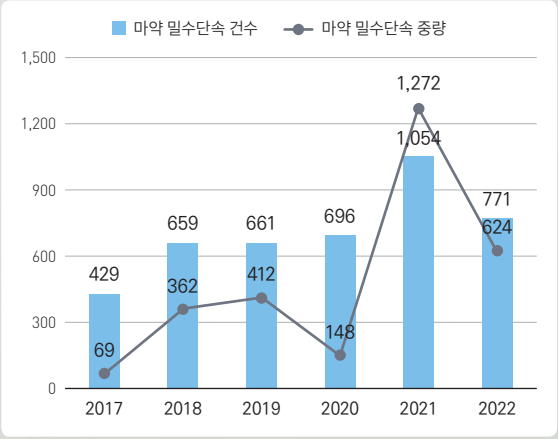
조현희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hyunheecho@kpfis.or.kr)

범죄	수사	마약사범	가스	경찰
강남	친구	마약범죄		
검찰	매매	감기약		
택배	음료	통관		

주: '마약'이 포함되어 검색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행정안전부 혜안시스템,
통계청 뉴스기반통계검색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등 키워드 재구성(2023.5.10.)
수집기간: 2023.4.11.~2023.5.10.

마약 밀수단속 추이

(단위: 건, kg)



자료: 관세청,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관세청의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는 매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밀수사범 사건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429건이던 마약 밀수단속 건수는 2021년 1,054건으로 약 246% 증가했으며, 중량 또한 2017년 69kg에서 2021년 1,272kg으로 약 75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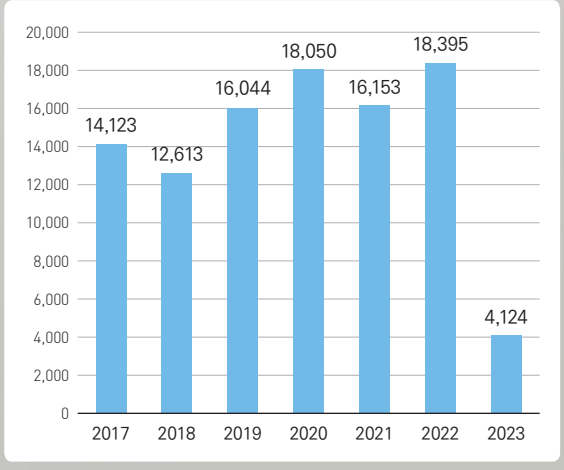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2017년 1만 4,123명이던 전체 마약류 사범 수는 2022년 1만 8,395명으로 약 30.2% 증가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집계된 마약류 사범은 4,124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의 경우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대의 비중도 2017년 0.8%에서 2.6%로 높아졌다.

이렇듯 점점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4개월간 대응하였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 적발 수는 5,809명이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했으며, 중독자 치료는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 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인터넷 등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전체 마약사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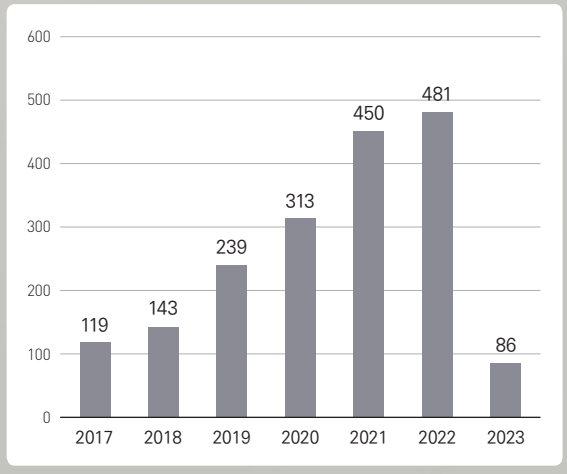
(단위: 명)



주: 2023년은 3월까지의 통계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10대 마약사범 추이

(단위: 명)



주: 2023년은 3월까지의 통계
자료: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4월 국가의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강화를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 정보를 분석하여 마약류 불법 유통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며 교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를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의 4대 투자 중점 중 하나로 선정했다.

마약 관련 주요 재정사업

최근 마약과 관련된 예산은 마약수사와 마약치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3년 기준 마약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있으며,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마약수사,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정부는 2008년부터 전 국민 및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2023년에는 전년 대비 8.1억원(-5.4%) 감액한 141.2억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49.6억원), △중독자 치료 지원(4.1억원), △청년 중독관리사업(4.0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약 관련 사업 외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정신의료-돌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정신질환자와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해당 사업에서 추진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자 조기 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은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청년 중독 관리사업'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층 마약류 중독을 비롯한 중독 문제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중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약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소관	관련 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보건복지부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2]	117.3	149.3	141.2
법무부	마약수사	41.9	43.9	48.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31.0	33.0	36.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1	25.8	35.4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30.5	25.8	34.8

주 1) 2021년은 결산, 2022, 2023년은 본예산 기준
2) 2021년까지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마약수사

정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사범 및 공급조직을 단속하고 국제 마약수사 공조 강화로 마약류 밀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마약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1989년 전국 검찰청과 공항·항만에 마약 관련 팀이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마약류 공급 국가와의 MOU 체결, 국제 마약조직 대응 팀 신설·운영 등 주로 중대 밀수범죄를 단속한다. 최근에는 유통 범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인터넷·SNS 등 비대면 마약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7억원(10.8%) 증액한 48.6억원을 편성했으며, 2024년에는 수사 차량, 탐지장비 등 마약범죄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수사 활동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수요 감축 사업이라는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992년 4월 민간단체로 출범하여 1993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마약류 및 약물 남용 예방을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7억원(11.1%) 증액한 36.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국민 예방교육(2.6억원), △사회 복귀 지원(24.1억원), △기관운영 및 인건비(10.1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 마약류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9.6억원(37.0%) 증액한 35.4억원을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시스템 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거나 중복처방을 방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힘쓰고 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원료물질 지도·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 마약류 불법 사용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참여형 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2023년에 전년 대비 9.0억원(34.9%) 증액한 34.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센터

Ⅰ. 해외 동향

미국

■ (5.2.) 재무부 장관, 의회의 부채 한도 상향 승인 없이는 빠르면 6월 1일부터 채무불이행 위험 경고[1]

•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할 만큼 높은 잠재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
- 이러한 우려가 최근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며, 투자자들이 정부의 채무불이행 발생 가능성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초단기 국채 매수에 집중

• 한편, 부채 상한선 증액 논의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의는 교착화된 상황
- 공화당은 부채 상한선을 높이는 대신 지출은 삭감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상한선 증액 주장
- 지난주 공화당의 주도로 재량 지출을 2022회계연도 수준으로 되돌리고, 연간 지출 증가율을 10년간 1%로 제한하는 법안 하원 통과

* CBO는 해당 법안을 통해 10년 동안 재정적자 4조 8,000억달러 감축이 가능하다고 예측

-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조건부 부채 상한선 증액 요구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언급

• 대통령은 차주, 공화당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현재 부채 상한선(31조 4,000억달러) 인상을 위한 논의 진행 계획

■ (5.8.)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부채한도 상향 협상 교착상태 해결을 위해 하원의장(Kevin McCarthy) 등 의회 지도자들과 논의 예정[2]

• 국가부채한도 상향에 대해, 백악관·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한 반면 공화당은 지출 삭감 연계 주장
- 일부 미 행정부 관리들은 공화당이 요구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 한, 여름말까지 부채 한도를 단기적으로 연장할 가능성

• 오는 화요일 예정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 간 회의

는 보다 실질적인 협의를 위해 비공개 회담 계획
- 상원의원 100명 중 부채 상한선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43명이기 때문에, 60표가 필요한 부채 상한선 폐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
- 전문가들은 하원 공화당이 제시한 10년 계획 대신 연방 지출을 2년간 제한하고, 내년 선거 이후까지 부채 상한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

• 한편,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재차 경고하며, 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지출 삭감에 대한 협상 의지 표명
- 촉박한 일정이 상원 지도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되는 상황에서, 백악관과 의원 지도자들 간 합의에 도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 부채 한도 연장' 등 여러 대안 검토 중
- 국가부채 상한선 협의에 대한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 지급 불능의 상태로 이어지고, 미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위험

■ (5.12.) 백악관-미 의회 주요 인사 간 부채한도 협의 일정 연기[3]

• 백악관과 의회 실무진 간 협상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협의 진전을 위해 대표자들 일정도 연기
* (참석 예정자) 대통령 Biden, 하원의장 McCarthy, 상원 대표 Schumer, McConell, 하원 소수당 대표 Jeffries 등
- 향후 협의에서 채무불이행 대처를 위해 코로나 19 대응 시 의회에서 승인했던 자금의 미 사용금 회수, 에너지 프로젝트 가속화, 지출 한도 규모 등에 대한 논의 예정
- 하원의원 Aderholt, 협상 일정 연기로 인해 합의 도달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 또한 공화당 측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담을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 부채 한도 해제와 10월 1일 새 회계연도 계획에 대한 협상 필요
- 상원의원 Graham, 예산 및 부채 한도 인상, 재정적 제약(Fiscal Restraint)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

■ (5.19.) 재무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실적 보고서 발표[4]
*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EU, G7 등 서방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배럴당 60달러) 합의

• 원유 가격 상한제의 주요 목표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감소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 달성
-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연방 정부의 원유 수입은 전년도 대비 40% 이상 감소
- 전쟁 이전, 러시아 예산의 30~35%가 원유 판매 수익이었으나, 2023년 23%로 감소
- 러시아는 2022년 3월 대비 2023년 4월 원유 수출량이 약 5~10% 늘었음에도 수익은 감소

1 https://www.wsj.com/articles/treasury-secretary-janet-yellen-says-u-s-could-default-as-soon-as-june-1-without-a-debt-ceiling-increase-6714ed7c?mod=us_lead_story
2 https://www.wsj.com/articles/biden-lawmakers-look-to-break-impasse-on-debt-ceiling-3b6e6809?mod=economy_lead_pos1
3 https://www.wsj.com/articles/white-house-debt-ceiling-meeting-postponed-1ba93d28?mod=Searchresults_pos5&page
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491

• EU, G7, 호주는 향후 가격 상한제 및 글로벌 에너지 안보 유지를 위한 지속 협력 결의
- 글로벌 석유 시장의 지속적 모니터링 진행 예정이며,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유지해나갈 것

■ (5.22.) G7 정상회담 합의사안인 '러시아 제재' 이행을 위해 관련 지침 수정 및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강화 방안 발표[5]

*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으로 테러리스트, 마약 밀매자 등에 대하여 경제 제재 프로그램 관리 및 수행

• 러시아의 전쟁 물품 및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E.O. 지침* 수정 및 OFAC 제재 사항 공개

* E.O. 지침 14024: 러시아 연방 정부의 유해한 해외 활동 관련 재산 차단 지침

- 러시아 거주 미국인이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출, 재수출, 판매, 공급 금지 결정
-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연방 국부 기금, 러시아 연방 재무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인의 재산을 OFAC에 보고하도록 E.O. 지침 수정
- 군산복합체의 유지 및 개발에 필요한 외국산 반도체 관련 부품 등 군사, 기술, 산업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제재
-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전문가를 위한 교육기관, 새로운 추출 기술을 개발하는 러시아 연구기관, 시추 및 채굴 작업을 촉진하는 러시아 기업,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자문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제재 시행
- 러시아의 국제 금융 시스템 이용 축소를 통해 전쟁 자금 조달 억제 목적

■ (5.23.) 재무부 장관 Yellen, 6월 초 재무부 현금 부족 가능성에 대해 의회로 서신[6]

• 6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인상 또는 유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무부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가능성 지적
- 5월 17일, 재무부는 특별 조치* 시행을 통해 920억달러를 제외하고 모두 소진했으며, 5월 18일에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은 573억달러, 6월 초에는 특별조치 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

* 부채 한도 유지를 위해 공무원 퇴직, 장애인 연금 신규 투자 유예, 6월 5일까지 시행 예정

- 6월 초, 만기 도래하는 국채로 인해 재무부의 차입 비용 급증

• Biden과 McCarthy는 예산 협상 타결을 위해 고군분투 중
- 부채 한도 협상은 일요일 저녁 2시간 이상,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다시 진행 중

■ (5.30.) 지난 5월 28일 부채한도 협의 결과, 2025년까지 부채한도 적용 유예와 지출 상한선 동결에 합의[7]

• 국방 분야 외 지출 상한선 동결, 코로나19 관련 자금 반환, 복지 수혜자의 근로 요건 강화 등 합의
- 비국방 지출은 2025년에 1% 상향, 국방 지출은 올해 대비 3% 증가한 8,860억으로 상향, 2025년 이후부터 지출 상한선 해제
- 5월 공중 보건 비상사태 공식 종료에 따라 미사용 코로나19 자금 약 300억 반환
-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혜자의 근로 자격 연령을 50세에서 54세로 상향 조정

* 저소득 미국인을 위한 식품·영양 지원 프로그램, 1인이 주

당 최소 20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혜택 적용

- 국세청에 800억달러가 할당되었으나, 이 중 200억달러를 삭감하여 비국방 분야 지출로 전환
- 환경 영향 검토 과정 간소화를 통하여 화석 연료 및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취득 절차 개선
- 이외, 학자금 경감, 세금 인상,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조항 폐지 등은 협상에서 제외

• 이번 주 내 법안 표결 시행 예정(하원 표결 화요일, 상원 표결 수요일 예정)

- 법안 승인 시, 2024년 11월 차기 대통령 선거 종료까지 차입 가능

영국

■ (5.3.) 영란은행(BOE)·재무부, 자산매입기구(APF) 보유자산 한도 축소 합의[8]

• 영란은행은 산하 자산매입기구(Asset Purchase Facility, APF)를 통해 통화정책 목적으로 국채 등을 매입하여 관리

• 2022년 2월, 통화정책위원회(MPC)는 영란은행에게 APF 보유채권(국채 및 회사채)의 만기도래분 재투자 중단, 회사채 포트폴리오 축소를 위한 매각계획 마련 등 양적 긴축 권고

- 이후 2022년 9월에는 국채(Gilts) 보유 및 만기도래분 매각을 통해 향후 12개월간 7,850억파운드까지 축소(-800억파운드)할 것을 권고

* 2022년 2월~2023년 4월 19일: (국채)597억파운드 감소, (회사채)140억파운드 감소

• 오랜 합의에 따라 지난 4.28일, MPC는 통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APF 보유채권 한도를 기존 8,510억파운드(Gilts 8,153억파운드, 회사채 60억파운드)에서 8,213억파운드로 축소 결정

- 이번 결정은 추후 검토를 거쳐 10월 확정될 예정이며, 영란은행과 재무부는 실행 여부와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 (5.8.) 통계청(ONS), 2022년 1분기 생산성 지표 발표(Productivity Overview, UK)[9]

• 영국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에너지 가격 증가,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재편에도 불구, 이러한 격변이 노동생산성 상승 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4분기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02.1(2019=100)로 2019년 대비 2.1% 증가, 1인당 노동생산성은 100.4(2019=100)로 2019년 대비 0.4% 증가

• 그간 예산책임청(OBR), 영란은행 등이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위험을 경고한 바와 달리 노동생산성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원인에 대해 다양하게 평가

- 통계청 수석이코노미스트(Grant Fizner)는 노동생산성 증가가 대유행의 수수께끼(One of the puzzles of the pandemic)라며, 위기로 인한 구

5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494
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22/yellen-says-it-s-now-highly-likely-us-out-of-cash-early-june?srnd=economics-v2
7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5744615
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sset-purchase-facility-apf-ceiling-april-2023
9 https://www.ft.com/content/0bad26d0-92a3-4f70-8ae3-9dff6c77d8f1

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 결과로 평가

- 생산성 연구소(Productivity Institute) 책임자(Bart van Ark)는 코로나19 봉쇄가 온라인 회의나 의사소통을 위한 문서공유 등에 필요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생산성의 즉각적인 상승요인으로 분석
- 이 밖에도 정부의 코로나19 재정 지원이 기업의 도산 방지 및 근로자 일자리 유지 등에 도움이 된 것이라는 시각 등 존재

• 한편,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행정서비스업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기여도) 건설업(0.7%p), 행정서비스(0.5%p), 도소매업(-0.5%p), 제조업(-0.5%p) 등

■ (5.16.) 재정연구소(IFS), 소득세 과세구간 동결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A deepening freeze: more adults than ever are paying higher-rate tax)[10]

• 2021년 영국 정부는 소득세 과세 구간 동결 조치 발표

- 세율 20%, 40%가 적용되는 과세구간 시작 기준을 각 연 소득 1만 2,570파운드, 5만 270파운드로 설정하고, 2028년 4월까지 6년간 동결하기로 결정

• 재정연구소(Institute of Fiscal Studies)는 최근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세수 기준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반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영국 성인 가운데 40%의 고율 소득세 납세자 비중은 1991~1992년 3.5%에서 2022~23년 11%로 증가했으며, 2027~2028년에는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특정 직업별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간호사와 교사의 5~6%만이 고율 세금을 납부했으나, 2027~2028년에는 간호사 8명 중 1명 이상, 교사 4명 중 1명 이상이 고율 납세자가 될 전망
- 고율 납세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정부의 소득세 과세구간 동결 조치에 따른 것으로, 동 조치는 1979년 제프리하우 총리의 부가가치세 15% 인상조치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세로 기록될 전망
-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현재의 동결 조치로 2027~2028년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1.4% 낮아질 것으로 전망

■ (5.24.) IMF, 영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United Kingdom: Staff Concluding Statement of the 2023 Article IV Mission)[11]

-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영국 경제는 2023년 경기침체를 피하고 플러스(+)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은 0.4%로 4월 경제전망(-0.3%) 대비 0.7%p 상향 조정, 이후 2024년 1%, 2025~2026년 평균 약 2%로 점차 개선될 전망
  - 다만, 지난해 이후 급격히 둔화된 경제활동과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상황 등은 경제성장 위험 요인
- IMF는 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을 우선시할 것과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 강조, 이밖에도 정책 구조개혁 및 녹색성장 가속화 필요성 제언
  -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목표치(2%) 안착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필요, 점진적 대차대조표(B/S) 축소를 통한 양적긴축(QT) 지속 필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재정정책) 중기재정 건전화* 달성을 위한 노력 지속 필요, 최근 국민건강서비스(NHS) 등 임금인상 문제 해결과 기술·혁신·인프라·친환경 투자 전환 등을 위한 재정 확충 노력 필요**

* FY2022-23 및 FY2027-28 사이 GDP 대비 재정적자 3% 감축과 공공부문순부채 GDP 대비 97%로의 안정화 계획

** 구조적 지출조정, 탄소세 강화, 부동산 평가액 업데이트 등을 통한 재산세 개혁 등 제언

  - (구조개혁) 재정정책 변경 시 예산책임청(OBR)의 영향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재정분야 구조개혁 필요, 은행 부실 시 금융 분야 안정성·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규제개혁 필요
  - (성장 촉진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 성장 촉진을 위한 증거기반 개혁 권고*, 녹색전환 추진

* ① 영구적 자본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예측 가능한 세금·규제 제도를 통한 정책 확보, ② 중소기업 금융 및 R&D 지원 강화(예: EU Horizon Europe 복귀), ③ 녹색전환과 의료 인프라 제공 등을 위한 공공 투자 가속화, ④ 기술 및 교육성과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한 노동 참여 확대, 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이민 시스템 검토

10 https://ifs.org.uk/publications/deepening-freeze-more-adults-ever-are-paying-higher-rate-tax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5/22/mcs052323-united-kingdom-staff-concluding-statement-2023-article-iv-mission

■ (5.25.) 국세청(HMRC), 면세 보육 제도(Tax-free childcare) 관련 통계 발표[12]

• 면세 보육(Tax-free childcare)은 보육비 지원 정책 중 하나로, 보육비 세금 감면을 통해 11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연 최대 2,000파운드 지원(장애가 있는 경우 16세 이하 자녀에게 최대 4,000파운드 지원)

* (자격요건) 연간 소득이 각 10만파운드 이하 최저임금(또는 생활임금) 이상인 근로자, 주당 16시간 이상 근로자, 세액 공제·사회수당(Universal Credit)·보육 바우처 미수령자

- 면세 보육 계좌에서 보육료 8파운드 지출 시 정부가 2파운드를 자동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최근 정부가 가계 예산에 부담이 되는 인플레이션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 가운데, 생활비 경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면세 보육제도를 시행

•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 HMRC) 통계에 의하면, 2022~2023과세연도 기간 중 면세 보육제도로 649,935가구(전년 대비 +137,500가구)가 혜택을 보았고, 향후 100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5.26.) 재무부, 경제성장 및 생명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Life Science for Growth' 발표[13]

• 생명과학 분야는 매년 28만명 이상의 고용과 940억파운드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국의 핵심 산업으로, 정부는 투자 촉진, 규제개혁, 인재 및 기술 향상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재무부는 25일, 생명과학위원회 회의에서 10여 가지 세부 정책을 포함한 6억 5천만파운드 규모의 '성장을 위한 생명과학 정책(Life Science for Growth)' 발표

- 신약 개발 속도 확대를 통해 혁신적 의약품이 환자들에게 빠르게 제공되도록 임상시험 규제 완화 등(1억 2,100만파운드)
- 50만 영국 시민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생의학 데이터베이스인 바이오뱅크(UK Biobank) 역량 확대 등(1억 5,400만파운드)
- 영국 내 고성장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수단 마련을 위해 정부의 기술 및 과학 분야 장기 투자(Long-term Investment for Technology and Science, LIFTS) 계획 발표 예정(2억 5천만파운드)

• 이번 발표로 생명과학 분야의 고급 기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은 물론, 향후 보건 분야 발전으로 국민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U

■ (5.3.) EU 결속정책: 2021~2027 프로그램(EU Cohesion Policy: 2021~2027 programmes)을 통해 EU에서 130만개의 일자리 창출 전망[14]

• 2021~2027 결속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1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뒤 EU의 GDP를 평균 0.5%(일부 회원국은 최대 4.0%) 증가를 전망

• 디지털 전환, 원활한 친환경 전환,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융합, 포용적인 유럽, 영토적 결속 등을 목표로 총 5,450억유로 투자 예정이며, 이 중 3,780억유로를 EU가 지원 예정

■ (5.9.) 유럽연합, 러시아에 '군사 목적 사용 가능 제품 제공 중국 기업' 대상 제재 확대[15]

• EU는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 8곳을 제재하는 방안 검토
- 제재 대상은 중국 기업 중 군사 목적용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 제품을 모스크바에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 러시아에 대한 11번째 대(對) 러시아 제재 패키지(Package of sanctions)*의 일부로, 러시아 군대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함

* 유럽과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켜, 전쟁 자금 마련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정책

- 중국 기업 8곳 중 6개 기업은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이미 미국 제재 목록에 포함

• 제재가 시행되려면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며, 오는 금요일 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 계획
- 이 조치는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제재 경고를 반영한 결과
- 한편, 중국은 EU의 제재에 대응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EU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키고, 세계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 경고
- 또한 선진 7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번 주 일본에서 러시아의 제재 우회에 대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

■ (5.23.) EU 집행위원장(von der Leyen), 韓-EU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측의 환경·보건·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 협력을 약속하는 성명 발표[16]

•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하며, 양측 간 체결되는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기존의 협정을 강화할 것
- 한-EU는 비즈니스, 교육, 문화 분야에서 풍부한 교류가 있었으며,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이 110% 증가하며, 양국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음을 강조
- 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공동 이니셔티브를 시작

• 양국 간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1) 한-EU 그린 파트너십, 2) 한국의 Horizon Europe 가입 협상, 3)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4)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약정 출범을 논의할 계획
- (그린 파트너십) 탄소 가격·삼림 벌채·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규제를 통합하고,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수소 경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모색
- (호라이즌 유럽) 세계 최대 규모의 EU 연구 프로

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650000-families-cut-childcare-costs-using-tax-free-childcare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reveals-life-sciences-growth-package-to-fire-up-economy
14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462
15 https://www.wsj.com/articles/eu-targets-eight-chinese-companies-in-russia-sanctions-push-a5fe6c2e?mod=economy_lead_pos1
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3_2862

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 것. 양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미래 기술을 위해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디지털 파트너십)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도록 협력하여, 한국 반도체 제조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보건 비상 대비 약정) 공급망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

• 끝으로,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에 대해 EU는 한국과 전적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 언급

■ (5.25.) 집행위원회, EU 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권한 부여를 위한 새로운 법안 제안[17]

• 위원회는 소매 투자 패키지(Retail Investment Package)를 제안함으로써,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개인 투자자의 신뢰와 자신감을 높여 미래에 안전하게 투자하고, EU 자본시장 연합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패키지는 유럽인들이 높은 저축률에 비해 저조한 EU 자본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간 자금을 EU 경제에 유입해, 이를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자금으로 쓰일 수 있게 함

• 법안은 투자 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 및 포트폴리오의 투자 성과를 명확히 제공, 오해의 소지가 있는 투자 마케팅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 이 법안은 금융 프레임워크가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럽 시민에게 저축의 일부를 투자에 사용함으로써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장려

■ (5.31.)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EU 실업률(Unemployment rata varied widely across EU regions)[18]

• 2022년 EU 국가들의 실업률(14~74세)은 6.2%이나, EU국가들의 제2종 통계지역단위명명법(NUTS 2)으로 분류된 242개 지역마다 상이

* 통계지역단위명명법(Nomenclature des Unités territoriales statistiques, NUTS)은 통계조사를 목적으로 EU 국가들의 행정구역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지리코드

-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체코의 중부 보헤미아(1.2%), 프라하(1.6%), 남동부 및 남서부(1.7%) 지역 및 헝가리의 중부 트란스다뉴비아(1.7%) 지역 등이 해당
- 스페인의 세우타(28.4%), 멜리야(21.6%), 안달루시아(19.0%) 지역과 프랑스의 최외곽 지역인 과들루프(18.6%)에서 높은 실업률을 보임

•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실업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스페인의 멜리야, 세우타 지역(각각 1.8%p 증가)과 프랑스 과들루프(1.5%p 증가)
- 그리스 남 에게해 지역(8.1%p 감소),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5.6%p 감소), 그리스 서부지역(-4,9%p 감소) 등이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청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체코의 중부 보헤미아(1.7%), 남서부(3.1%), 프라하(3.2%), 독일의 바이에른주(3.3%), 헝가리 서부 트란스다누비아(3.6%) 순
-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스페인 세우타(42.4%), 그리스의 테살리아(39.8%) 및 중부(36.5%), 스페인의 멜리야(36.1%) 순

독일

■ (5.9.) OECD 2023 독일 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Germany 2023) 발표[19]

• OECD는 독일이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필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전망
- 지난 10년간 강력한 수출 주도 성장, 실업률 감소, 재정흑자 등을 보여주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및 에너지 위기를 통해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

•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공공부문의 지출 압박 증가와 숙련된 노동력 부족 증대
-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의 노동세 감면', '기술 인력의 이민 촉진', '저숙련, 고령 노동자의 교육 및 훈련 개선'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 기업 역동성, 투자와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 진입 장벽 완화, 경쟁강화, 스타트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 필요
- 이를 위해, 행정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 등의 공공행정 현대화 필요

•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해결을 위해 공공자원 필요
- 조세지출 감소, 조세 집행 강화, 공공부문 지출 효율성 제고, 지출 우선순위 개선 등 필요

• 2045년 탄소중립 달성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 유지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비용 완화 정책 필요
- 친환경 R&D 촉진, 지속 가능한 교통 및 전력 인프라 확충, 주택 부문 탈탄소 등의 분야에서 탄소 가격 책정 강화를 보완하는 부문별 규제 및 보조금 필요
- 탄소세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및 노동시장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등으로 사회 결속력 강화 필요

■ (5.22.) 연방 재무부는 2023년 4월까지의 연방 예산 추이(수입, 지출, 재정수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고[20]

• (수입) 2023년 4월까지 연방 수입은 약 1,149억 유로로 전년 대비 0.3%(약 3억유로) 증가
- 세입은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0.2억유로 감소), 기타소득(Other income)은 전년 대비 7.6%(약 6억유로) 증가

• (지출) 2023년 4월까지 연방 지출은 약 1,572억 유로로 전년 대비 1.2%(약 19억유로) 증가
- 지출 증가는 투자 지출이 주도, 전년 대비 50.2%(약 53억유로) 증가, 소비지출은 약 35억 유로 감소, 금리 인상으로 이자 지출은 약 134억 유로 증가

• (재정수지) 2023년 4월까지 연방 예산은 약 423억유로의 적자를 기록
- 수입, 지출, 순차입은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도 변

1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868
18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stat-news/w/ddn-20230530-2
19 https://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economic-surveys-germany-2023_9642a3f5-en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Standardartikel/Press_Room/Publications/Monthly_Report/Key_Figures/2023/2023-05-federal-budget.html

동 폭이 크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재정수지 및 순차입 수치는 최종 수치(확정치)와는 차이 발생

• (세수동향) 2023년 4월 총 세수(지방자치세 제외)는 전년 대비 4.6% 감소
- 세금 감면 조치로 공동세 수입이 약 5% 감소. 연방세(연방에만 귀속되는 조세)는 에너지세, 보험세, 항공세가 증가했으나, 담배세 수입은 감소해 전년 대비 1% 증가

〈표 1〉 **2023년 4월 기준 연방 예산 동향**

(단위: 십억유로, %)

	2022년	2023년	2023년 4월 현황(누계)
수입	364.7	389.9	114.9(0.3%)
지출	480.7	476.3	157.2(1.2%)
재정수지	-116.0	-86.4	-42.3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5.26.)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2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우려 심화[21]

• 독일 연방통계청, 독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 발표
- 지난해 4분기(-0.5%)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며 기술적 경기침체(GDP가 2분기 연속 감소)에 진입
- 이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은 추가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할 전망

• 역성장 주요 원인은 1분기 1.2% 감소한 민간 소비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 소비력이 약화된 것
- 1분기 독일 가계 소비는 전분기 대비 1.2% 감소한 반면, 전년 대비 식료품 구매 가격이 21.2% 상승
- 한편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은 2분기에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이자 비용 증가 및 기업 성장의 약세 등 하방 위험 존재

• 유럽연합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0.2% 감소한 이후 1분기 0.3%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독일 역성장이 향후 ECB 금리 결정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월스트리트저널, ECB 정책 입안자들이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유로존 경제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 지적
- 독일의 기술적 경기침체가 최근 유로존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론적 시각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

호주

■ (5.2.) 경제 여건 개선으로 2007~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 기록 전망[22]

•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률 개선으로 인한 재정 수입 증가로 15년 만에 2022~2023회계연도 흑자 달성 가능성 증가
-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로 철광석 등 수요 급증으로 재무부의 원자재 평균 예측가(철광석 톤당 55달러, 유연탄 톤당 60달러)를 훨씬 뛰어넘어 무역 흑자 견인
-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고용이 급증, 50년 만에 실업률 최저치를 기록하며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세금 규모 크게 증가
- 3월 기준 233억호주달러(155억달러)의 흑자 기록, 이는 작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예측치보다 높은 수치이며 25개월 만에 2,040억호주달러 규모의 흑자 전환으로 나타남

* 팬데믹 절정 시기에 1,342억호주달러(GDP 대비 6.5%)의 재정적자 기록

• 재무부는 재정 현황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으며, 5월 9일 다음 회계연도(2023~2024) 예산안 발표 예정
- 재무부는 단기적으로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나, 현재의 예산 기조 유지와 중장기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
- 외부 경제학자들 또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23~2024년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5.10.) 포트폴리오 예산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2023~2024, PBS)* 발표, 각 부처는 동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23]

* 상하원 국회의원에게 일반정부 소속 부처들에 대한 성과별 자원 배분 내역 및 정책 목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첨부 서류

• PBS는 일반 정부 15개 부처의 효과적 정책 시행 및 성과 관리 목적으로, '사용자 안내, 포트폴리오 개요, 기관예산요청서'의 세 부분으로 구성
- 예산 첨부 서류 중 하나로 기관 활동 및 세출안에 따른 지출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 성과 반영을 위한 기능으로, 각 포트폴리오에는 해당 부처 및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예산 정보 포함
- 각 부처별 PBS 정보는 크게 자원소요액(Entity resources)과 성과(Planned performance) 부분으로 구분되며, 기관별 성과 측정 및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산출체계* 명시

* 기관별 정책 성과 및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 및 최종 산출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산정 체계

• 재무부는 2023년 5월 예산 기준으로 2023~2024년 총 배정액은 2,018억호주달러이며, 이 중 관리 비용은 2,013억호주달러
- 재무부는 성과관리 우선순위로 ① 호주의 경제 회복 지원 및 인플레이션 수준 관리, ② 정부에서 요구하는 2023~2024년 예산 및 기타 경제 업데이트 사항 제공, ③ 정부 우선순위에 따른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 시스템 도입 촉진 등을 제시

〈표 2〉 **호주 예산서 형식**

예산 관련 제출서류	제출시기
예산안 시정연설(Budget speech)	5월 말
예산 개요(Budget overview)	5월 말
예산서(Budget Paper)	5월 말
포트폴리오 예산서 (Portfolio Budget Statements)	5월경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예산심의 종료 후 6개월 이내

21 https://www.wsj.com/articles/germany-enters-recession-in-blow-to-europes-economy-d252dad3
22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01/australia-s-rapid-fiscal-revival-brings-budget-surplus-in-view?srnd=economics-tax-and-spend
23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ortfolio-budget-statements-2023-24

이탈리아

■ (5.24.) 내각, 이탈리아 북부 홍수 피해 지역에 20억유로 규모의 지원 승인[24]

• 지난 18일,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Emilia-Romagna) 지역에 대홍수 발생
- 12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000명의 이재민 발생했으며, 농작물 피해는 약 15억유로(16억달러)로 추산
- 중앙은행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30억유로에 달하며 해변과 해안의 관광명소가 잠식되면서 관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이미 약 3천만유로의 예산 편성

• 추가적으로 정부는 홍수 피해 지역의 기업과 가계를 돕기 위해 20억유로(22억달러) 규모의 긴급 구호 예산 편성
- 도로와 학교를 재건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 지원을 목표로 함
- 피해 지역의 기업과 가계의 세금 및 주택담보대출 납부를 8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을 승인

프랑스

■ (5.4.) 소매업체, 필수 식료품 가격 인하 캠페인 연장 합의[25]

•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분기(Anti-inflation quarter)'를 연장하기로 소매업체와 합의
- 에너지 및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4월 기준 소비자물가 6.9% 상승
- 소매업체들이 일부 필수 식료품에 대해 낮은 가격을 부과하는 '인플레이션 억제 분기(Anti-inflation quarter)'라고 불리는 이 캠페인은 3월 초에 발표되어 6월 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종료 기한 연장
- '인플레이션 억제 분기' 캠페인 시행으로 현재까지 대상 품목 가격 5~7% 하락
- 재정경제부는 다음 주부터 식료품 가격 및 운송비 등의 가격 하락 효과가 소매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형 식품 생산업체, 소매업체와의 협상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재정경제부와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 이윤 증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경고
-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여 마진을 늘리는 대형 식품 생산업체를 단속할 계획
- 유럽 중앙은행은 기업 이윤·근로자 임금 연쇄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팃포탯(tit-for-tat, 맞받아치기) 인플레이션' 가능성 경고

■ (5.15.) 재정적자에 대한 외부 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감세 기조 유지[26]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최근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기업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유지
- 풍족한 삶과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부유하다고 판단한 중산층에 대해 세금 감면 기조 유지
- 법인세 측면에서는 장인, 기술자의 일자리와 산업 분야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을 위해 생산세 감면 필요성 제기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문의 정부 지원 이후 부채 증가와 재정적자 심화 → 중앙은행은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대안이 없는 한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 피치(Fitch)는 프랑스의 재정적자 심화와 최근 연금개혁으로 인한 사회적·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하며 지난 4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으나, 마크롱은 피치의 정치적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언급

* 정부는 퇴직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제도 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시위 촉발 및 의회 분열 야기

•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내 산업 부문 장려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수십억유로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

■ (5.18.) 재정경제부, 공급업체, 슈퍼마켓과 식료품 가격 관련 협상 재개 합의[27]

• 소매업체 가격 인하 캠페인 등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식료품 가격 상승 추세 유지
- 국내 식료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월 기준 15% 이상의 물가상승률 기록하며, 최근 식료품 가격 상승이 에너지 위기를 제치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힘
- 정부는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지원 정책에 이미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가계 식료품 비용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
- 두 달 전, 정부는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필수 식료품 가격 인하 캠페인을 시작했으나 주기적으로 가격 협상을 하는 공급업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식료품 생산업체들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슈퍼마켓과의 가격 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며, 예정된 협상 일정을 몇 달 앞당겨 5월 중 협상 시행 예정
- 재정경제부는 바릴라 홀딩스(Barilla Holding SpA), 코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Coca-Cola Europacific Partners Plc), 유니레버(Unilever Plc) 등 대형 식음료 제조업체의 임원들과 대면 합의
- 정부는 대형 생산업체의 가격 인하가 농민이나 소규모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협상의 전 과정을 감시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식료품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2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23/ital-s-cabinet-approves-2-billion-in-aid-to-flood-hit-areas?srnd=economics-tax-and-spend
2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03/le-maire-says-french-retailers-agree-to-extend-price-cuts?srnd=economics-inflation-and-prices
26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14/macron-wants-to-keep-cutting-taxes-despite-deficit-warnings
2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5-17/le-maire-says-french-food-price-talks-to-break-inflation-spiral?srnd=economics-inflation-and-prices

근대 재정의 탄생

3

미국의 행정부 예산편성

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 조세재정연구원장(dsoak@naver.com)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선언함과 동시에 국가의지의 결정 방법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제에 따라 국가의지의 결정 방법은 서로 다르다. 내각책임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기에 의회의 의지가 곧 국가의지로 간주된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립되어 있는 대통령제에서는 의회와 대통령의 상호작용(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가의지가 결정된다. 국가의지를 표현하는 입법의 경우 의회가 과반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은 거부(재의요구)할 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의지를 뒤엎기 위해서는 강화된 요건으로(예컨대, 2/3) 재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산으로 표현되는 국가의지의 결정방법은 입법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예산을 법률의 형태로 의결하지만, 입법에 비해 의회의 재량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1]. 의회의 예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국의 근대적 재정제도가 완성되던 19세기 말까지, 미국은 입법과 예산을 차별하는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미국은 1921년에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위임함으로써 비로소 권력분립의 대통령제에 적합한 근대적 예산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의회의 예산편성과 돈육 덩어리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1776년 당시 헌법기초자들은 헌법에서 의회가 재정권(power of purse)을 보유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 발전한 영국의 재정제도를 본받아 조세법률주의와 지출법률주의의 원칙을 헌법에 규정했다. 제1조(Article 1) 제8항(Section 8)에서는 조세의 부과권한이 연방의회에 있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명문화했고, 제9항에서는 지출

승인(appropriation)을 법률로 규정할 때에만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지출법률주의를 규정했다. 미국의 헌법은 이 두 조문을 통해 재정권이 의회에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회의 재정권, 즉 수입과 지출에 관한 권한을 독립 초기에는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가 1796년부터는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가 행사했다. 그런데 세입위원회는 각 부처가 보고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의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기에 모든 예산요구들을 특정 시점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없었다. 1802~1865년에 재무부 장관은 '추정치 명세집(Book of Estimate)'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들의 지출요청서를 취합 이첩하는 사무적 기능에 불과했다.

미국 헌법 제1조의 재정조항

제1조 입법부

제1항 (입법권)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8항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연방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미국의 채무를 변제하고, 공동방위와 일반복지를 위하여 조세,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관세, 공과금 및 소비세는 미국 전역을 통하여 통일적이어야 한다. …

제9항 (의회에 금지된 권한) … 국고금은 법률에 따른 지출승인에 의하여서만 지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정식 결산서를 수시로 공표하여야 한다. …

1865년에는 세입위원회 소관이던 지출 기능이 '지출승인 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로 이관되었는데, 그나마 존재했던 수입과 지출의 통일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출예산 편성을 위한 추천 권한이 각각의 상임위원회로 분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 숫자가 증가하면서 추천권한이 편성권한으로 변경되었고, 이들 위원회는 서로 독립적으로 각각의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s)을 불규칙하게 제시했다. 각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결정과 총지출 규모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각각의 필요에 따라 자체의 지출계획을 수립했다. 결국 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출과 수입에 대해 균형을 잡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1880년부터 1909년 사이는 연방재정이 극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기였다[2].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는 기관과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의원들을 압박했다.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적극 부응하여 로그롤링(logrolling)을 통해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

1 한국은 예산의 비(非)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다고 하여 의회의 예산권이 제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법률주의의 논의에 대한 개관은 옥동석. (2015). 「권력구조와 예산제도」의 '들어가며' 글 참조. 전 세계 21개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과 달리 의회의 예산수정권을 제한한다. 김종면·장용근. (2018). 「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함의: 재정헌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142-143 참조.

2 Burkhead, Jesse. (1956). *Government Budgeting*, New York, p.11 참조.

어 있었다. 이 당시에 지역구를 위한 예산은 '돈육(pork)'으로 이를 위한 법안은 '돈육 덩어리(pork barrel)'로 공공연히 비하되기 시작했다.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주인이 던져주면 노예들이 서로의 몫을 다투는 모습과 흡사하다면서 이러한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주·지역정부의 예산개혁

1900년대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은 연방, 주, 지역정부(municipalties)의 무질서한 예산현장을 지켜보면서 재정제도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역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인, 공무원들의 부정에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좋은 정부(good government)' 운동을 십자군과 같은 종교적 신념과 열정으로 추진했다. 예산은 정부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의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수단이어야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정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행정적 리더십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의 신념은 이후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3].

> 이들은 정치인들을 혐오했다. 그러나 시민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굳게 가졌다. 대체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순수하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정부를 열망하며, 또 의욕적이고 시야는 넓으며, 문제가 복잡할 때 많은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그러한 정부를 쟁취하고 지원할 만큼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효율성 이념(efficiency idea)'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었고 '유용한(useful)' 교육운동의 지도자였다. 시민의 자각과 투지, 효율성, 유용한 교육, 이 세 가지 용어는 '효율적 시민(Efficient Citizenship)' 운동의 핵심을 형성했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과 선출된 자 또는 그에 의해 지명된 자들 사이의 지적 협력에 있다'는 비전을 가졌다.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부분의 주·지역정부들은 재정운영에서 행정부 예산편성제도를 확립하는 개혁을 이룩했다. 개혁주도자의 역할, 좋은 정부를 위한 시민들의 열망, 재정지출 소요액 증가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예산제도의 개혁을 이끈 보다 더 결정적인 요소는 기업인 집단들의 압력에 있었다.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은 정부지출을 효율화하고 감축할 수 있는 예산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경비절감과 세금감소를 통한 재정감축이 곧 예산개혁으로 인식되었다.

3 Waldo, Dwight. (1948). *The Administrative State*, New York, pp.32-33의 내용으로서 Burkhead, Jesse. (1956). *Government Budgeting*, New York, pp.13-14에서 인용.

기업인들은 정부 내에 기업가 정신을 파급시키기 위하여 행정부 주도의 예산편성제도를 강력하게 지원했다. 당시 많은 주·지역정부에서는 독직, 부패가 만연하여 정부와 합리적인 거래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기업가들의 입장에서는 행정부 예산편성제도가 정부와 기업들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리적인 예산제도가 정비될 때 경쟁입찰 등 여타의 개혁들이 추진될 수 있으며, 기업과 정부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

1900년대 초기에 주·지역정부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예산개혁은 점차 연방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전환되었다. 1909년 윌리엄 태프트(William Taft)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연방정부에 두 가지 형태의 압력이 나타났다. 첫째, 연방정부 재정의 흑자 기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재정지출 규모는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만연했다. 둘째,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독직과 부패에 대해 끓어올랐던 증오심이었다.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했고 개혁 주도자들의 주장은 보다 심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잘못된 관행들을 타파하려는 십자군과 같은 열정이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방만함과 의회의 부패에 집중되었다.

취임 즉시 태프트 대통령은 '경제성·효율성 위원회(Commission on Economy and Efficiency)'를 출범시켰고, 1912년 1월에는 의회에 대해 '정부서비스의 경제성과 효율성(Economy and Efficiency in the Government Service)'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1912년 6월에는 경제성·효율성 위원회가 '국가예산의 필요성(The Need for a National Budget)'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 문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제도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예산제도는 신탁관리(trusteeship)의 헌법이론에 기초하여 시민들은 그들의 주권에 따라 신탁의 수혜자이고 신탁자들이다. 그리고 정부는 신탁의 수단이고 정부 관료들은 피신탁인이며, 대통령은 핵심적 정부 관료로서 예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921년 예산회계법(Budget and Accounting Act)은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대통령이 예산편성의 책임을 지고 매년 연방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재무부 내에 예산실(Bureau of the Budget)을 설치하도록 했다[4]. 예산실의 권한은 여러 정부부처 또는 기관의 추정치를 취합, 연결, 정정,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부기관의 요구가 그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은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직접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4 예산실은 1939년에 대통령실로 이관되었고, 1970년에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로 변경되었다.

금지되었다. 예산실은 예산편성 기능 이외에도 행정기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경제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그 개선사항을 모색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들이 의회의 요구에 따라 잘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기관(watchdog)으로서 회계검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했다[5]. 회계검사원은 회계에 대한 검사를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정부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총괄통제관(Comptroller General)으로 불리는 회계검사원장은 15년 단임으로서 상원의 동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미국 의회는 결산검사에 대한 영국의 공공회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에 회계검사원의 보고를 받고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은 각각의 상임위원회에 귀속되었다.

예산회계법의 제정에 부응하여 미국 의회도 지출항목(즉, 예산편성)을 제안하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의회의 규칙으로 재구성[6]했다. 지출승인 위원회가 모든 지출을 통합하여 주관하도록 했고, 모든 지출승인법안들이 이 위원회로 회부되도록 했다. 또 여타 위원회들은 그들이 심의하는 법안에서 자금의 지출항목(즉, 예산편성)을 포함하는 조문을 삽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의원들이 제안하는 모든 지출승인법안은 지출승인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출승인 위원회는 의원입법들의 본회의 이송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7].

의회 예산권의 제한과 대통령 거부권

예산을 대통령의 책임하에서 조정 편성하도록 한 예산회계법은 재정권을 의회에 전적으로 부여한 미국 헌법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당시에 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임에 분명했다. 이는 기존의 정부운영과 정부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었기에 반대가 일부 있었지만,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적 행태에 대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행정부 주도의 영국식 예산제도를 깊이 검토했는데, 이들은 영국 예산제도의 중요한 특징인 '입법부 증액금지'를 도입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했다. 만약 미국의 의회가 영국처럼 행정부가 제안한 지출항목들을 삭제 또는 삭감만 할 수 있고 증액을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려면 의회의 예산 수정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5 General Accounting Office는 2004년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Buck, A.E. (1929). *Public Budgeting*, p.412 참조.
7 현재 지출승인 위원회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도 개혁을 추진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주지사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주의회의 예산결정에 영국식 제한을 가하기도 했다[8]. 의회가 지출승인 항목을 삭제하거나 삭감하는 경우에서도 주지사가 자신의 지출제안을 방어하는 적절한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입법에 대해서는 총체적 거부권(package veto)이 인정되는 것과 달리, 예산에 대해서는 주지사에게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을 부여했다[9]. 의회의 '돈육 덩어리(pork barrel)'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예산항목에 대한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입법과 예산의 차별화

미국은 행정부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통령제의 안정적인 예산제도를 확립할 수 있었고 이후 전 세계의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의회가 19세기 말까지 직접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나타난 비능률, 부패, 사기 등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였다. 물론 그 이후 유명무실했던 미국 의회의 예산권은 1974년 의회예산법이 제정되면서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의회 내에 예산총량과 분야별 배분의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예산위원회를 설치했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구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그 역할들을 구분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재정적자를 타개하고자 의회 스스로 자신의 예산결정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입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1921년도 예산개혁은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적 입법과 달리 행정부의 우위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입법과 달리 예산에서는 그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에 우선순위와 효과성에 따른 중앙집중식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사업들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입법과 달리 특정 계층과 집단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행동하는 의회보다는 위계질서에 기초하는 행정부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8 의회의 증액 제한은 의회의 의사규칙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1920년대 당시 Maryland, California, Massachusetts, New York 등에서는 주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Buck, A.E. (1929). *Public Budgeting*, p.410 참조.

9 1929년 당시에는 주의 3/4 이상이 거부권을 인정했다. Buck, A.E. (1929). *Public Budgeting*, p.413 참조. 2021년 현재 미국 50개 주 중 44개 주에서 예산에 대해 항목별 거부권이 인정된다(The Council of State Governments, *The Book of the States*, 2021 edition, p.70 참조). 연방정부에서도 대통령에게 항목별 거부권을 부여했으나 1998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후 계속하여 이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위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혁신에 대한 회고

정해방 (전)기획재정부 차관

4대 재정개혁 또는 재정혁신이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Top-down제도의 도입,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통칭한다. 2003년 3월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각 과제는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초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하려던 Top-down제도 도입 계획이 2004년 1월 논란 끝에 2005년 예산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4대 과제를 연계 Package화하여 참여정부 4대 재정개혁 과제로 이름 붙여 2004년 초부터 추진하게 된다.

재정혁신의 시발 Top-down제도가 뭐길래?

2003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예산편성에 있어서 Top-down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통상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예산편성방식으로서의 Top-down이란 지출분야별로 사전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중기재정계획을 포괄하여 MTEF(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로 통칭하며, 재정적자 축소를 주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GDP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려는 Top-down제도는 그 의미가 달랐다. 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식, 즉 부처의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참여정부의 4대 국정원리의 하나인 '분권과 자율'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았으나 기획예산처의 분위기는 호의적이지 않았었다고 생각한다.

3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는 분야별 Top-down제도의 단계적 도입이라는 표현으로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당장 3월 말까지 2004년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산편성지침 국무회의 부의를 위한 사전회의에서도 부처별 한도 설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만 노 대통령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명칭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검토 결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의 고유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예산편성지침이 마무리되고 한숨 돌려 청계산에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던 4월 어느 날 장관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Top-down 시범사업을 내년 예산부터 바로 시행하자는 취지였다. 곧바로 시범대상기관(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4개 기관)을 설정하고, 지출한도 협의에 들어갔다. 이들 기관들은 예산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행정경비가 대부분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식적으로 지출한도가 통보되었다. 이어서 2003년 7월 발표된 참여정부 재정개혁 로드맵에도 부처별 Top-down제도에 관해 시범실시와 대상기관 단계적 확대가 명시되었다. 한편으로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재원배분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전면적 실시에 대비한 물밑작업이 진행되었다.

시범사업 및 단계적 확대에서 전면실시로

12월 30일까지 진행된 2004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끝나자마자 정부개각이 발표되었다. 신임 기획예산처장관의 부임과 함께 연초부터 부처별 Top-down제도의 전면도입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왔다.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간부가 모인 가운데 활발한 내부 토론이 벌어졌다. 찬반양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 예산총괄심의관 직책으로 예산편성업무를 총괄하는 실무국장이었으며, 전면도입이 결정된다면 지출한도 결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는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부처별 Top-down제도의 전면도입 방침은 논란 끝에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났다.

몇 가지 고민사항이 있었다. 첫째, 예산실 직원들의 Top-down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 및 설득이었다. 당시 직원들의 분위기는 Top-down에 부정적이었다. 편성방식 변화에 따른 불안감 즉, 나쁘게 말하면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이고, 좋게 말하면 부처가 제대로 책임 있게 편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였다.

둘째, 정부가 도입한 Top-down 방식을 여당 및 국회가 존중해 줄 것이냐는 것이었다. 통상 내각제 국가의 경우에는 국회의 다수당이 정부내각을 구성하므로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안이 큰 수정 없이 통과된다. 그러나 대통령제이면서 예산당정협의 등 내각제적 요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예산운용 관행상 상당 부분의 예산수정이 관례화되어 있어서 Top-down 방식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셋째, 좀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유보재원의 확보 문제였다. 부처 예산요구로부터 정부안 확정 시까지는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일종의 여유재원이 필요한데, 부처별 지출한도로 모든 재원을 배정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 등 정치권과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유보재원 문제는 실제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재원관리의 책임이 있는 몇몇 관계자들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었다. 우선은 예산실 직원들의 Top-down 도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급선무였다.

전면실시방침 확정 후 나는 예산실 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정여건의 변화, 증가하는 예산사업의 개별직접검토의 한계, 그동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사업비제도의 확대로 지출한도제도 운영경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와의 역할 재조정 필요성, 예산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과 각 부처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의 차별화, 각 부처 제출 예산안에 대한 협의조정 역할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 분위기는 착잡했지만 심각한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스스로도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할 뿐이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중기재정계획, 성과관리제도와 함께 재정개혁 3대 과제로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를 위한 Top-down 제도 도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개념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정부 내부에서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 간의 권한 다툼에 불과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좀 더 체계적인 정부의 재정혁신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의 하나인 '분권과 자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화가 요구되었다.

먼저 Top-down은 용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총액배분 자율편성'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부처별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했다. 미래 국가 발전 비전에 입각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총액, 분야별, 부처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 지출한

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작성 운용돼 오던 중기재정계획이 재정개혁의 핵심 어젠다이자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운용경험은 꽤 오래된 것이었다. 다만 외부 공표 없이 내부 자료로만 활용했고, 단연도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부족했을 뿐이다.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된 1982~1986년 중기재정계획을 시작으로 1987~1991년 중기재정계획, 1993~1997년 재정운용5개년계획, 1999~2002년 중기재정계획, 2003~200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1999~2002년 계획은 외부에 공표했고 국회에도 보고된 바 있으며, 참여정부 초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명칭이 정리되었고,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단연도 예산편성의 준거가 되었다. 또한 매년 연동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시스템도 확립되었다. 특히 2004~2008년 국가재재정운용계획서는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음을 밝혀둔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과를 높이는 문제는 어느 나라나 당면하는 재정운용의 영원한 숙제이다. 미국이 1993년 법제화(GPRA)를 통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는 시도를 하는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라는 용어가 예산편성지침에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기억되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1999년부터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되기는 했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처의 자율편성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시급했다.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계획서-성과보

고서 체제의 목표관리 방식의 전면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분권과 자율 그리고 책임이란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에 맞추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도입-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라는 참여정부 3대 재정개혁과제는 2004년 초에 그 모습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재정개혁 4대 과제로

1980년대 초 필자가 처음으로 예산실에 근무할 때 어느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미국보다 앞서나 그 후 발전이 없어 매우 뒤처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전산시스템 문제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겪었던 웃지 못할 얘기들도 많다. 예산실이 독자적으로 전산장비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 1990년대 초로 기억한다. 그 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2000년대 초 전산시스템 활용수준은 계산기를 대체하고 정형화된 서식을 공급해주는 정도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정책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마침 참여정부 출범과 동시에 구성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윤성식 교수가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은
> 우리나라 예산서 체계의
>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했고, 관계기관 간의 논의 끝에 2004년 초에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 내 의견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미 추진키로 한 재정개혁 3대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뒷받침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개혁과제로 추가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라 명명하고, 재정개혁 4대 과제로 Package화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했고 2004년 5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기획단장에는 이창호 국장(당시 워싱턴 근무)이 임명되었다. 가정사 때문에 미국 근무 중이던 이 국장은 조기 귀국이란 어려운 결정으로 힘든 임무를 기꺼이 맡아 주었다. 요즈음도 가끔 만날 때마다 그때의 미안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기획단은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여 2005년 10월 프로그램 시범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산서 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7년 1월 1월 새로운 시스템이 그 모습을 드러냈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은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의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재원배분 국무위원 토론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내 설치된 국가재원배분개선기획단이 구상한 절차가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전 국무회의 멤버가 실무자 배석 없이 토론을 통해 부처별 지출한도를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기획단이 조사한 해외 일부 국가의 끝장 토론 방식이 참고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

2004년 4월 예정된 최초의 재원배분회의는 갑작스러운 대통령 탄핵사태로 연기되어 6년 19일 국무위원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처음으로 개최되어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재정개혁'과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보고되었다. 탄핵 중에 이미 2005년 지출한도가 잠정 통보되어 사후 승인의 형식이 되어버렸고, 이미 예산편성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생각보다 토론은 일찍 종결되었다. 필자가 보고 중에 "Top-down제도 도입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다"면서 "금년도에는 기획예산처 주차장이 한산하다"라고 했더니 산업자원부 장관이 "기획예산처는 좋겠지만 과천종합청사는 방문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4월 공식적인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시간 토론회의를 위해서는 방대한 토론자료가 필요했다. 또한 보안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국회의 회의자료 공개요청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도 2005년 재원배분회의가 토론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튿날 아침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토론 끝에 채택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토론을 좋아했기 때문에 1박 2일 일정의 재원배분회의는 임기 중 유지되었으나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에서 토론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재정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지만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진행 중인 재정혁신의 향후 과제

재정혁신의 이름으로 추진된 재정개혁 4대 과제는 종결 없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야 할 재정운용의 핵심과제이며,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며 현시점에서 더욱 발전시켰으면 하는 향후 바람을 제기하면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첫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를 회복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중기계획제도이며 그 성공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둘째, 지출한도의 설정과 자율성 확대는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예산당국과 각 부처 간 서로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당국의 협의 조정이 합리적으로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관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마인드를 갖고 관계자 간에 토론을 통해 공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예산 편성과정보다 결산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Feedback 해야 한다.

끝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정부 내부의 예산회계관리 및 정책결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될 것을 확신한다.

위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다

Interview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실 민철기 정보화담당관

팬데믹을 통해 비대면 기술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고 있다. 다양한 ICT 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변화시키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디지털 정보화 기술을 접목하여 일하고 있을까?

글. **정재림** 일러스트. **강태이**

정보화 기술 기반하의 업무처리 혁신과제

최근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구글 사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바둑 기사 이세돌의 대결이 4대 1의 결과로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해 5월에는 미국의 대형 법무 회사인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Baker&Hostetler)가 AI 변호사인 '로스'를 채용해 인간 변호사 50명이 수행하는 파산 분야에 배치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2017년에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AI 투자분석프로그램 '켄쇼'를 채용해 회사 직원 600명 중 AI 관리 직원 2명을 제외한 598명을 해고했다는 기사로 세상이 떠들썩했다. 2022년 11월에는 OpenAI 사가 ChatGPT(생성형 AI)를 발표했고, 이는 우리가 영위해온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할 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업무 수행 방식은 그동안 해오던 방식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 조직 내에서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계기로 기획재정부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화 기술 기반하의 업무처리 혁신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기획재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정보화 기반으로 바꾸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철기 정보화담당관의 소개다.

"저도 2022년 8월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은 디지털 정보화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두 가지 혁신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추진하는 혁신과제 첫 번째는 보유 중인 데이터를 민간,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여 공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민관 합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상적인 직관적 의사결정 방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기법에 따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부는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왔습니다. 2023년 5월 말까지 총 171건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부 홈페이지와 열린재정(재정정보 공개사이트), 알리오(공공기관정보 공개사이트),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관리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개방된 데이터의 한 예로, 기획재정부의 시사경제 용어를 민간기업인 다음백과(카카오)와 시사경제 용어앱(All Time Hero)에 연계하여 일반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일반 국민이 접속하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행안부의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도 데이터 26건을 등록했다. 이 외에도 약 51개 기관에 재정정보, 공공기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e나라도움 지능형 부정수급 탐지모델을 통해 분석한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의심사업 4,503건을 도출하여 지자체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도 했다.

혁신과제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

민철기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 기술 기반하의 업무처리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체계 없이, 데이터를 생산한 부서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하다 보니 자료를 찾기가 어렵고, 양식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각각 부서별로 운용되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공개하다 보니 데이터 작성 방법, 출처, 검색 방법,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과제 수행에 대한 직원의 이해 부족으로 데이터 공개는 물론, 데이터 분석과 분석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실적도 매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차원의 추진체계 없이 부서별로 개별적인 과제가 추진됨에 따라 추진 동력이 부족했고, 부서 간 협업 노력이 부족하여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보화담당관실은 올해부터 과제 시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다.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가장 먼저, 조직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데이터 관련 부서장을 팀원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TF'를 구성했다.

> 정보화담당관실은 기획재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정보화 기반으로 바꾸는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혁신과제 첫 번째는 보유 중인 데이터를 민간,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여 사회문제를 민관 합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의사결정 방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기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TF는 공공데이터 발굴·제공, 분석과제 선정, 분석·활용,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주요 사항 논의를 통해 부서 단위의 과제를 조직 차원의 과제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국 행정계장을 데이터 책임자로 지정했고 실효성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직원의 관심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직원 성과급 지급을 위한 내부 성과평가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2.5→7.5점) 했다.

"배점 확대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도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과 학습동아리를 개최해 직원들의 과제 이해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방적인 공급자 위주의 데이터 제공 방식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4월 간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수요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관련 부서에서 신규 데이터 개발을 위한 데이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요자 조사에서 나타난 데이터의 품질, 이용 편의성 등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로는 과제 발굴·분석·정책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추진한다.

"사업 부서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부서가 데이터 분석기법, 적용방법론 등의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과제가 우리 부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우선 선정되도록 정책연구 관리규정(기획재정부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데이터 분석 업무가 강화되도록 조치한다. 디브레인에 보유된 데이터나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국고보조금추진단 e나라도움 기초 데이터(260개)의 통계분석 모델을 분석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업을 적발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에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구축 계획을 수립해 ISP 추진 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ICT 기술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처리 혁신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생산한 정책과 제공 서비스가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초대형 철제 구조물 에펠탑의 탄생 비화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프랑스 파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호주의 시드니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뉴욕에 가면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은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에펠탑이며, 호주 시드니는 오페라 하우스이다. 뉴욕에 여행을 가면 해보고 싶은 것 중에는 반드시 센트럴 파크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유의 여신상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여러 영화에서 주요한 장면에 많이 나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의 전망대를 떠올릴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건물이나 공원뿐만 아니라 거리에 놓여 있는 조형물이나 조각상, 거리에서 전개되는 공연, 도시 벽에 그려진 벽화 등 공공조형물 형태인 예술품은 대부분 이러한 효과를 가져다주는데 이러한 형태의 예술품들은 일반적인 예술품과는 달리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란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공공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합성'과 '배제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먼저 배제성이란,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내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물건이 배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비배제성이란,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 치안이나 국방 서비스의 경우 누구 한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배제성과 함께 재화의 특성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인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특정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내가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웃집에서 해당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반면 비경합성이란, 누군가의 소비 여부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새로운 소비자가 추가로 진입한다 하더라도 기존 소비자의 소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케이블 TV의 경우에는 내가 수신료를 지불해 신청했다고 해서 옆집에서 케이블 TV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학은 우리가 소비하는 일련의 재화와 서비스 등을 배제성과 경합성의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중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내포하고 있어, 비용을 부담한 사람 외에도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공원, 가로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산 역시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경제적 의미에서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생산요소로서의 기능, 투자나 자산으로서의 기능, 소비재 기능이 그것이다.

먼저 생산요소로서의 기능이란, 해당 부동산을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논과 밭뿐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 모두 생산요소로써 부동산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투자나 자산으로서의 기능이란, 국내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시하는 부분이다. 얼마 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자산 비중은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6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여타 주요 국가들인 호주(61.2%), 영국(46.2%), 일본(37%), 미국(28.5%)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소비재로서의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국립공원을 들 수 있다. 국립공원은 무언가를 새로이 생산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고, 자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도 아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이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공기 정화 기능, 환경 보호 기능 등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처럼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부동산의 공공재적 특성 또한 여기에 기인한다.

소비재형 부동산이 공공재적 특성을 보이는 이유 역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을 통해 얻는 혜택은 누구에게만 돌아가고 누구에게는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배제성이 없다. 물론 국립공원 입장료가 배제성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입장료 수준은 누군가를 막기 위한 진입장벽 효과를 보이는 수준이라기보다는, 국립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배제성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소비재형 부동산은 비경합성도 보인다. 일반적

> 거리의 조형물이나 국립공원, 축제 등은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 이러한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가진다.

인 재화들은 누군가가 더 많이 이용하면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덜 이용하게 되지만, 국립공원의 자연 경관과 공기 정화 작용 등의 혜택은 나보다 누가 먼저 누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누가 먼저 누리든 간에, 나 역시 언제든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과 같은 소비재형 부동산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익들은 여타 다른 공공재인 치안, 국방 서비스 등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공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소비재형 부동산은 국방과 치안 등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해당 편익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해당 편익을 구축할 경우, 나 또한 그러한 편익을 얻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소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소비재형 부동산은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고 돈을 낸 사람에게만 해당 편익을 제공하여 금전적 이득을 챙기기 어렵다.

브라질의 리우 축제의 경우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의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서 생겨났다고 한다. 이것을 점차 발전시켜 지금과 같은 형식의 카니발이 완성되었다. 초반에는 보통의 거리축제에 지나지 않았다. 그 뒤 삼바학교들이 설립되고 학교별로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지금과 같은 큰 규모의 축제로 발전했다. 오늘날 리우 축제는 10만명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로 자리 잡았다.

옥토버페스트로 알려진 독일의 맥주 축제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1920년 가을 바이에른 왕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루드비히 황태자와 작센 공국의 테레사 공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초청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던 것에 기원한다. 이것이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가 끝난 것을 자축하기 위한 축제로 계승되었고, 지금은 맥주 제조 회사들이 자신들의 맥주를 선전하기 위한 시음회 등이 결부되어 전 세계 700만명이 참여하는 성대한 축제로 발전했다.

이와 같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춘 공공재적 성격의 재화는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그 혜택은 누구나 공짜로 누릴 수 있다. 즉, 무임승차(Free Ride)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공공 예술품 이외의 다른 공공재인 치안 서비스, 도로, 다리, 등대, 가로등과 같은 시설들도 민간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시장실패의 치유 차원에서 정부가 대신 나서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공공예술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공영방송의 편성 내용이라든가, 도시 건물의 벽화,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에 직간접적

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세계적인 조형물로 너무나도 유명한 에펠탑의 경우, 처음 설립 당시에는 많은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되었다. 프랑스는 파리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짓기로 했다. 전 세계인에게 프랑스의 발전상과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에펠탑이라는 초대형 건축물을 철제 구조물로 건설하기로 했다. 철은 군함, 대포 등 군사력을 보충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용되는 자원인데, 이처럼 귀한 자원인 철을 거대한 예술품에 사용할 수 있는 국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파해서인지 에펠탑 건립 당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은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다. 유명한 문인, 화가, 음악가들 300명이 모여 에펠탑 건립 반대 운동을 했다. 그중에는 단편소설 작가인 모파상, 시인 베를렌느, 작곡가 구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반대를 무마하고자 에펠은 일부러 높은 층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고, 에디슨을 비롯한 당대 유명 인사를 두루 초대한다.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높은 공간에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파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상상할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결국 이러한 체험을 한 많은 예술가들은 에펠탑에 대한 건립 반대 운동을 철회하게 된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문화상품인 에펠탑이 탄생한 것이다. 다른 모든 공공재가 그러하듯이 에펠탑의 유지 보수의 주체 역시 정부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제공해 준다면 나 또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직접 공급하려고 나설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 역시 없다. 누군가 유지 관리해 준다면, 나는 계속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에펠탑의 경우 7년마다 도색작업을 해야 하며, 칠을 하고 보수하는 시간만 해도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조형물이나 축제가 새로이 기획될 때는 많은 진통이 있다고 한다. 혈세를 낭비했다든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서 그럴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결코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에펠탑이 세워졌을 때 누군가 그러한 여론에 밀려 계획을 취소했다면 파리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명소이자 관광지로 각광받지 못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위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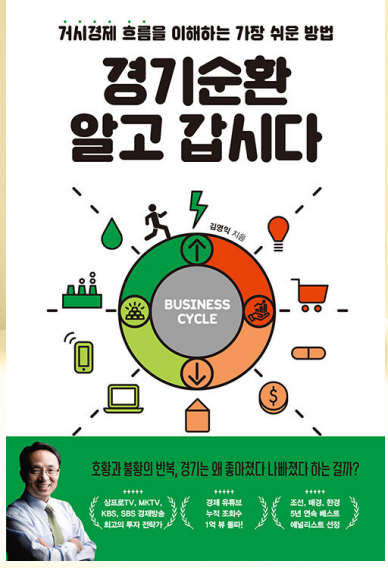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도서 추천

경기순환 알고 갑시다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지은이 김영익
출판사 위너스북
발간일 2023년 4월 20일



교보문고 ©

저자 김영익은 하나대투증권 부사장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자신만의 '주가예고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9·11테러 직전의 주가 폭락과 그 후의 반등, 2004년 5월의 주가 하락과 2005년 주가 상승 등을 맞춰 일약 '족집게' 애널리스트로 떠올랐다.

경기는 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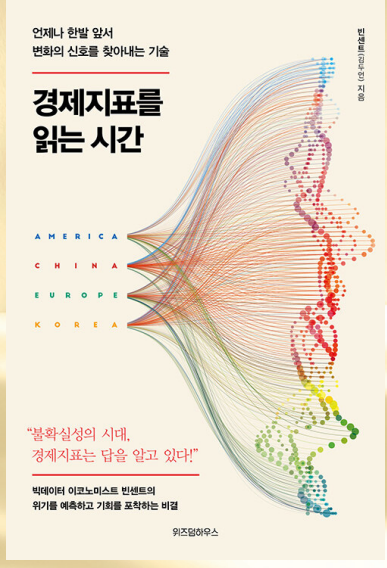
미래의 경기를 모르고 과잉 투자했다가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반대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경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지표를 제시했다. 경제에 문외한 사람들도 경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썼으며, 경제지표와 주가의 관계도 연결시켜 설명했다. 이 책에서 다룬 경기 관련 데이터는 매월 혹은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데, 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기르면 스스로 경기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7개의 경제지표를 배우고 익힌다면, '경알못(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경제 공부에 쉽게 입문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을 읽음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한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지침서가 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시각을 책을 통해 배워보자.

경제지표를 읽는 시간

언제나 한발 앞서 변화의
신호를 찾아내는 기술

지은이 빈센트(김두언)
지은이 위즈덤하우스
지은이 2023년 4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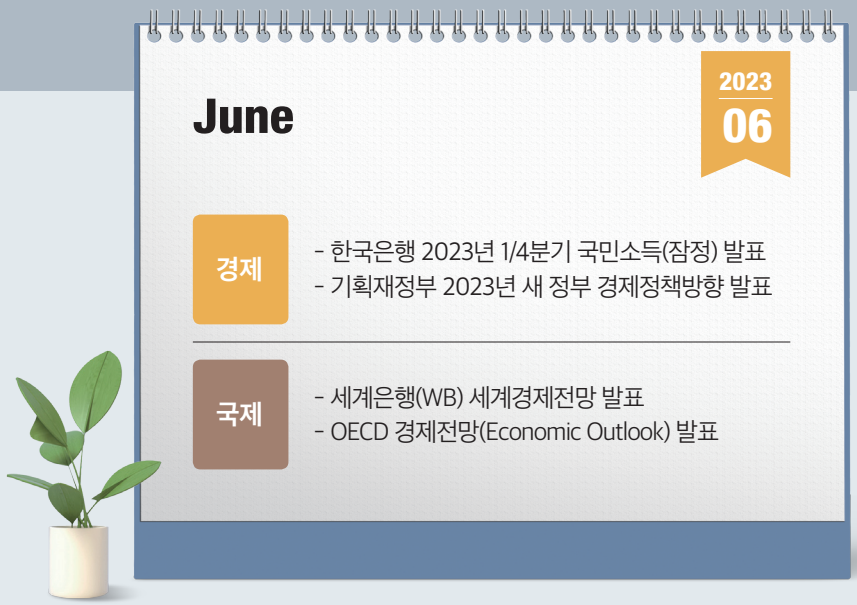
©교문고

저자 빈센트(김두언)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을 날카롭게 예측해 수많은 투자자가 믿고 따르는 경제학자다. 금융 스타트업 업라이즈에서 MFO 총괄직을 맡고 있으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 거시경제분석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자산분석실, KB증권 자산배분전략부를 거치며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모든 해답은 경제지표에 있다!

이 책은 글로벌 경제지표 독해법을 알려주는 책으로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시의성 있는 경제지표를 분야별로 엄선해 소개한다. 경제지표란 생산, 소비, 취업 등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여러 데이터의 집합이다. 따라서 경제지표를 읽을 줄 알면 세계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와 기회가 다가올지 포착하는 힘이 생긴다.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 책은 수많은 경제지표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저자만의 인사이트를 적용해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와 그 지표를 이해하는 방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다. 이 책과 함께라면 앞으로 펼쳐질 냉혹한 침체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익힐 수 있을 것이다.

Fiscal **Calendar**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기재부, 5.4.)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점검, 대응 방향 논의
-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시장 모니터링 강화, 취약 부문 점검 강조

2023년 기금평가 결과 발표 (기재부, 5.24.)

-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 타당성과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
- (기금존치평가)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24개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
- (기금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등 30개 기금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43.3%)로 작년(14개, 43.8%)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통화정책방향(2023.5.25.) 발표 (한국은행, 5.26.)

- (기준금리)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국내 경제는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나갈 예정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5.26.)

- (가계소득) 실질소득은 3분기 만에 감소에서 보합(0.0%)으로 전환되고 근로소득은 양호한 고용시장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8.6%),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하여 총소득은 4.7% 증가
- (소비지출)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11.5%)함에 따라 흑자액은 감소(-12.1%)
- (가계수지) 흑자액은 116.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 평균소비성향은 70.7%로 전년 동기 대비 5.1%p 증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2022년도 우수등급

달성!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재정정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S 한국재정정보원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낌 점을 적어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애독자 QUIZ

문제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중 하나로 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방식, 즉 부처의 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도입된 제도이며 통상 국제적으로는 중기 재정계획을 포괄하여 MTEF(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로 통칭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답 □□□ - □□□□ **제도**

독자편지

010-****-*144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재정 내용을 보다가
키워드 재정 반려동물의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만나니
월간지가 친숙해지는
느낌이에요~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 기간
2023. 6. 30. ~ 2023. 7. 7.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010-****-*107	010-****-*719
010-****-*763	010-****-*219
010-****-*662	010-****-*493
010-****-*231	010-****-*144
010-****-*688	010-****-*724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해 주세요.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5th World Scout Jamboree

2023.8.1-12 SaeManGeum, Jeollabuk-do, KOREA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 2023 SaeManGeum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kakao OURHOME BFL TERRA NH농협은행 NongHyup Bank

25 years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지원하며,
자체 모니터링, 정부감사,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입니다.

기부금의 94%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지원금액
7,334억

2022년 모금금액
7,925억

연말에 모금액이 집중됨에 따라
일부 모금액은 다음해에 지원됩니다

홈페이지 가기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다문화	위기가정	지역사회	해외/북한
	1,578억	954억	469억	343억	1,852억	2,035억	103억

사업분야	기초생계	교육/자립	주거/환경	보건/의료	심리/정서	사회적 돌봄 강화	소통/참여 확대	문화격차 해소
	3,857억	915억	735억	528억	285억	659억	210억	145억

[해당 지원내역은 2022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록입니다. 지난해 7,334억 원으로 전국 약 3만 개의 협력 기관과 함께 40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랑의열매 무료 광고입니다.

FIS 한국재정정보원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fis.kr

06
9 772508 897000
ISSN 2508-8971